

격변의 세계 한반도 평화의 향방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모색합니다

프로그램

| 1부 | 식전 행사

| 2부 | 주제발표(사회: 코리아통합연구원 최민수 이사장)

[발표1] 중동상황과 한반도 평화(발표: 정상률 박사, 토론: 김해순 박사)

[발표2]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발표: 임상순 박사, 토론: 박종철 박사)

[발표3]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발표: 박찬석 박사, 토론: 윤향희 박사)

| 3부 | 종합토론(사회: 새로운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이창희 박사)

행사개요

| 일시 | 2026. 6. 22.(월)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이인영 국회의원, 공주교육대학교 평화안보통일교육사업단,
새로운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인영 국회의원, 공주교육대학교 평화안보통일교육사업단,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코리아통합연구원 연합 세미나]

주제 : 격변의 세계 한반도 평화의 향방은?

1. 일시 : 2026년 6월 22일(월) 14:00~17:00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주최 : 이인영 국회의원, 공주교육대학교 평화안보통일교육사업단,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코리아통합연구원
4. 프로그램 순서

1부 : 식전 행사(14:00~14:20)

- 공주교육대학교 안보통일교육사업단 단장 인사말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이사장 인사말
- 유라시아평화통합연구원 이사장 인사말
- 코리아통합연구원 이사장 인사말
- 이인영 국회의원 축사
- 기념 사진촬영

2부 : 주제 발표(14:20~15:50) (사회 : 코리아통합연구원 최민수 이사장)

[발표 1] 중동상황과 한반도 평화(30분)

: 발표자(정상률 박사), 토론자(김해순 박사)

[발표 2]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30분)

: 발표자(임상순 박사), 토론자(박종철 박사)

[발표 3]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30분)

: 발표자(박찬석 박사), 토론자(윤향희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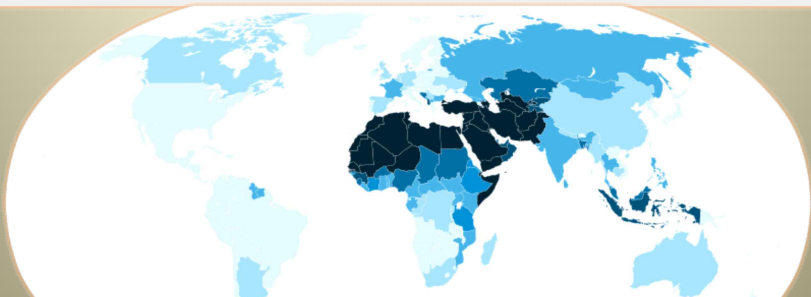
[휴식] 중간 휴식 시간(15:50~16:00)

3부 : 종합 토론(16:00~17:00) (사회: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이창희 박사)

2026 국회(이인영의원실)-4개 연구원 통합 심포지엄

중동 상황과 한반도 평화

- 미 & 이스라엘-이란 전쟁과 이란 핵 문제를 중심으로 -



정상률(전 명지대학교 교수, 현 유라시아통합연구원)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2026년 6월 22일

1. 분쟁/전쟁 원인:
 - 1)정체성 위기의 극단적 행위
 - 2)분쟁 원인의 복합성
2. 분석 방법: 추세(경향, 역사적 추세) 분석, 국제(지역)구조 분석(국내구조, 행위자 즉 국가, 리더쉽 분석 생략)
3. 중동 분쟁/전쟁사 및 중동 국제관계(구조) 변화 현황
4. 이란 핵 위기론 대두와 국제적 해결 노력(JCPOA), JCPOA 주요 내용 및 일정, 관련국들의 입장
5. 트럼프 정부의 JCPOA 탈퇴와 그 이후의 이란 핵 관련국들의 대응
6. 최근 중동 국제관계 변동 현황
7. 미 & 이의 이란 공습 및 전쟁 현황
8. 최근 국제질서 변동 현황
9.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평화를 위한 제언

1. 중동(MENA) 분쟁사(전쟁사), 정체성 충돌

1-1. 중동지역 개념

- 협의의 중동, 광의의 중동, 확대중동-북아프리카(Broader Middle East & North Africa),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25(아랍국 22개국)+2 + ... 개국



- 협의의 중동
- 광의의 중동
-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확대중동(Broad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
- 중앙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개념(?)

1-2. MENA 국가들의 정체성

확대중동-북아프리카(Broad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 (25+2)개국

| 언어권별, 문화권별 분류 | | 석유의존 경제 | | 다변화 경제 | |
|------------------------|----------------|---|----------|----------|--|
| | | 왕정 | 공화정 | 왕정 | 공화정 |
| 아랍어권 (아랍연맹 22개국) | 이슬람문화 |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UAE) 6개 국가) | 이라크, 리비아 | 요르단, 모로코 |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수단, 예멘, 알제리, 튀니지, 소말리아, 팔레스타인, 모리타니(이원집정부제 이슬람공화국), 지부티(이원집정부제공화국), 코모로(연방제 대통령제 공화국) |
| | 비아랍어권 (3+2) | | 이란 | |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
| | 비이슬람문화 | | | 이스라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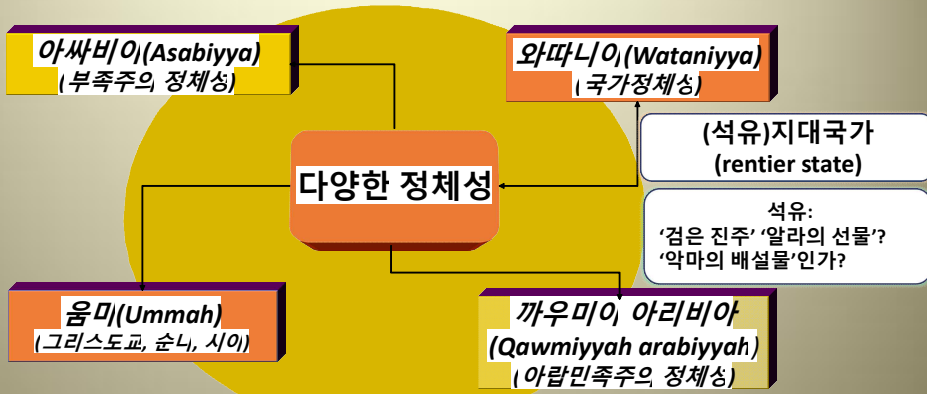
* 모리타니아, 지부티, 코모르는 아랍연맹 회원국으로 중동지역에 포함되지만 중요성으로 보아 본 연구 사업에서는 제외함 중앙아시아 몇 개 국가를 확대중동 개념에 포함하기도 하나 아직 정설로 정립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함

미&이스-이란 전쟁: 정체성 위기

- 종교-종파 위기
- 역사 위기 (사이크스-피코 협정, 이스라엘 건국과 하마스 헤즈볼라와 전쟁, 79 이란 이슬람 혁명과 미 대사관 직원 444 일 인질...)
- 에너지 위기
-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기
- 군사적 위기(핵 위기)
- 외교 위기 (2020 아브라함협정...)

.....

1-2. MENA 국가들의 정체성 (다정체성과 분쟁/전쟁): Falt Line



국가 내 다정체성 뿐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연계된 정체성이 얽혀 있음

1-2. MENA 국가들의 정체성 (다정체성과 분쟁/전쟁): Fault Line

- 분쟁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중심성 혹은 자기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됨
- 자기 정체성이 '우리의식'으로 범주화되면, 그 범주 밖의 존재를 구별하거나 거부 또는 배타하면서 '우리의 정체성'도 강화됨. 그 과정에 타자에 대한 폭력이 특정한 집단 안에서는 마치 정당한 권리처럼 작동됨.
- 민족국가에서 주권의식이 강화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함.

어떤 권력 안에 있는 이들이 권력의 범위 밖에 있는 이들을 차별하면서 그렇게 차별하는 이들 간에 '공범의식'이 정당화되고 그 권력 안에서 주권의식이 강화됨.
(내전, 내전의 국제화 현상).

<문명의 공존(Das Zusammenleben der Kulturen)>의 저자인 하랄트 뮐러(Harald Müller)는 헌팅턴의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인간은 ‘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정체성이란 ‘경계’이다.

변혁, 위기, 곤경의 시기에 불안이 증가하고 경계가 중요해진다.

적, 희생양을 찾는 욕구가 발생하고, 이 욕구는 ‘낮선 자’를 향한다.

적이란 무서운 위협이지만, 특히 시대가 사악할 때, 그만큼 그리운 대상이기도 하다.

탈냉전 시대에 서구는 훨씬 안전해졌지만, 일상적 삶은 더 안전해지지 않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틈새를 <문명의 충돌>이 파고들었다.”

** 이란의 전 대통령 세예드 모하메드 하타미의 <문명대화>도 <문명충돌>을 비판함.

1-3. 전쟁 원인의 복합성(complex causes of war)

- 분쟁(전쟁)은 왜 발생하는가? 인간은 왜 싸우는가?: 답하기 쉽지 않음.
- 영토-국경 분쟁, 이념 분쟁, 종교-종파 분쟁, 인종-부족-민족 분쟁, 자원 분쟁, 문명 분쟁(충돌)....등과 같이 모든 분쟁은 그 원인이 있으며, 대부분의 분쟁은 '복합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 결국 정체성 간의 충돌.
- 이-팔(하마스, 헤즈볼라) 분쟁은 영토-국경 분쟁, 민족분쟁, 종교분쟁이 복합적으로 작용.
- 국제정치학자들은 분쟁 원인을 일반적으로 ①인간의 생물학적-심리적 원인, ②국내 정치 구조 원인(국내 구조 원인, 민주평화론), ③무정부적 국제관계 원인(국제사회의 구조적 원인)으로 대별하고 있음

1-4.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원인: 인간의 생물학적-심리학적, 국내정치 구조 원인 생략

- **투키티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 원인을 **‘국제체제에 본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의 구조, 즉 (불균형적인) 권력배분 상태’에 있음을** 강조(Waltz 1959, 159; Gilpin 1981, 93).
- **박성우:** 왈츠와 길핀 같은 신현실주의자들이 투키티데스가 주장했다고 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서 전쟁원인을 찾는 것, 전쟁원인론에 국한해서 투키티데스를 읽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에서 **‘새로운 투키티데스 읽기’**를 주장. 그는 투키티데스가 **‘개별 국가의 특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국내체제 구조 원인)**을 주장(박성우 2008).

- **왈츠(Kenneth N. Waltz):** 전쟁원인을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결함 (무정부적 국제체계)**, 국내정치구조상의 결함(전쟁도발 야욕 제어장치를 결여한 국내정치체제), 정치지도자의 권력욕(인간본성)에 있다고 주장(정치사회불완전론).
- **라이트(Quincy Wright):** 1965년에 『전쟁연구』(A Study of War)에서 평화란 국제정치에서 여러 형태의 힘의 평형을 유지하는 배열의 상태로서, **전쟁은 국제정치체제의 구성체 상호간에 존재하고 있던 평형이 파괴되면서 발생한다고 주장.** ‘세력 균형을 통한 평화’를 말하고 있음

- **이지원: 왈츠는 전쟁원인을 ①아우구스티누스, 홉스, 스피노자, 니버, 모겐소가 주장했던 인간의 호전적 본성, ②칸트, 월슨, 레닌이 주장했던 특정 정치경제 체제, 즉 국내체제, ③투키티데스, 루소가 주장한 국제적 무정부성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전쟁 원인의 복합성'을 강조했으나, 그 중에서도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전쟁의 '허용적(permissive)' 원인으로서 가장 결정적이라고 주장**
- **또한 이지원은 바스케즈(John A. Vasquez)의 전쟁단계이론, 아롱(Raymond Aron)의 역사사회학적 인과분석을 설명한 후, '전쟁 원인의 투키디데스적 종합: 비극적 서사'라고 주장.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비극적 서사를 통해 전쟁의 다양한 내생적-외생적 요인들을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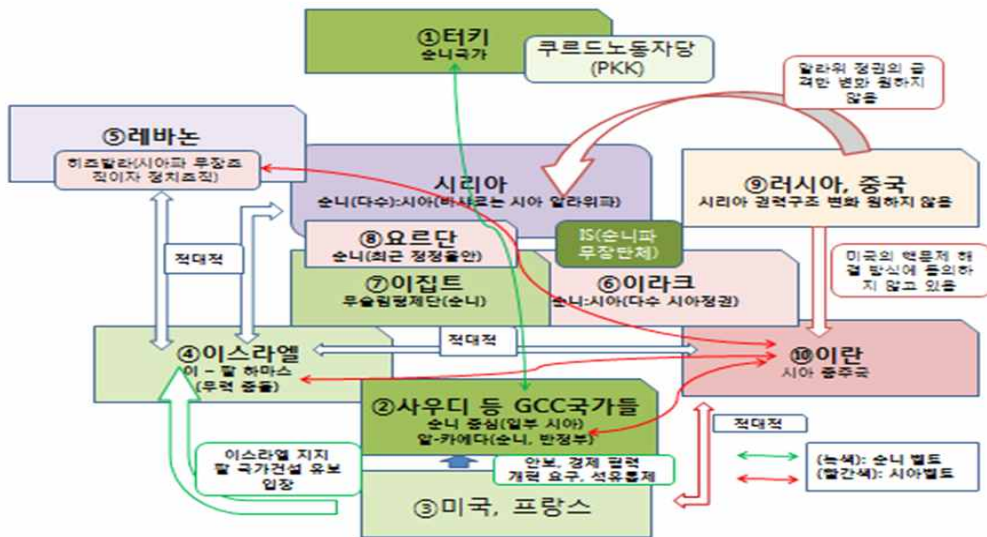
- **나이(Joseph S. Nye):** 분쟁의 외생적 원인 중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을 강조함
 -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 관계를 오늘날 **근대 국민국가들 간 국제관계, 즉 국제적 무정부성의** 전형으로 간주하고, 도시국가들 간 분쟁과 이해에 따라 **합종연횡 상황**을 설명함.
 - 아테네인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했지만, '안보 딜레마'**에 빠진 것임
 - 안보 딜레마는 국제정치의 필수적인 특징, 즉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구조'와 관련이** 있음
 - 무정부 상태에서 한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 또는 분쟁은 모든 다른 이웃 국가의 불안정을 초래. 이러한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함.

- 그런데 왜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들은** (협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력하지 않는가?
안보 딜레마는 **특정 형태의 수인의 딜레마 게임 상황과 유사함**
- **수인의 딜레마 게임**: 합리적인 죄수는 상대방의 선택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판단 하에 선택. **2인의 비제로섬 게임(non zero-sum game)** 상황에서 언제나 **'협동(침묵)'보다는 '배신(자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합리적 행위자는 배신(자백)을 택하는 상태, 즉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의 결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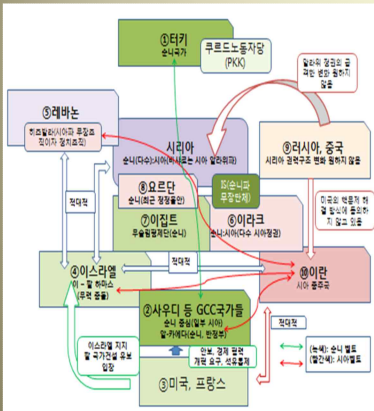
-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나 자신도 현재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또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과 유사함**
- 결국 결과는 최악(무기징역 또는 사형)은 아니지만 둘 모두 내쉬균형에 빠짐.
- **내쉬 균형**: 게임 이론에서 경쟁자(상대, 적)의 대응에 따라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 결국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균형상태에 다다름을 말함.
5년을 복역하는 것이고, 이는 둘 모두가 자백하지 않음(협력, 침묵)으로써 1년을 복역하는 것보다 나쁜 **딜레마적 결과 초래함.**

- 이와 같이 **국가 간 협력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즉 **'신뢰의 위기 상황'** **'불확실성'**에서 **모든 국가(행위자)**는 **안보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됨.
- 1950년대 말~1970년대 초의 핵 경쟁에서 **미-소는 결국 '핵 안보 딜레마'**에 직면(미국의 국무장관을 역임한 키신저가 일찍이 **'안보 딜레마론'** 제기함).

2. 중동 국가들 간 단층선(2020년 전후)



2-1. 중동 국가들 간 단층선 변화 (2000~2026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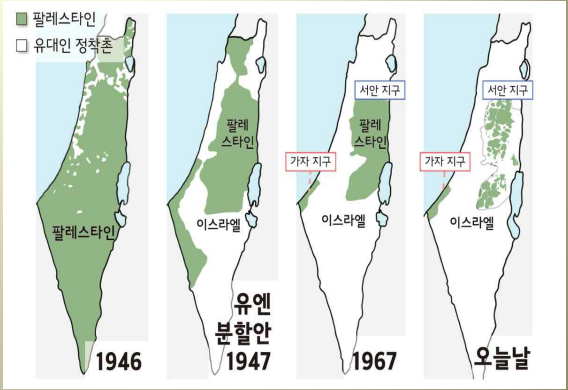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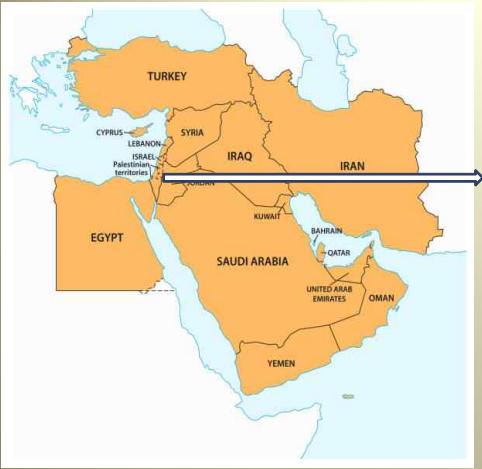
단층선에 변화 현상 나타남(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

.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붕괴(2024.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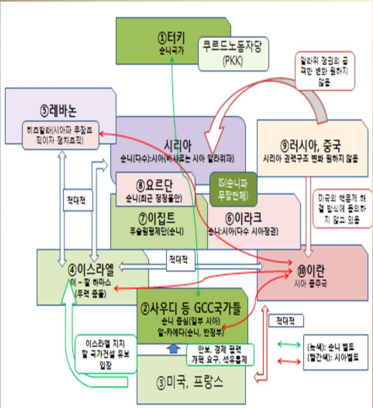
. 이스라엘과 UAE, 이스라-바레인(2020.9.15), 이스라-수단(20.10.23), 이스라-모로코(20.12.20) 간 **아브라함협정** 체결. 사우디와는 아직 아브라함협정 체결 하지 않음.(1979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1994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 평화협정 체결)

. **이란의 BRICs(2024.1.1), 상하이협력(SCO.2021.9.16) 기구 정회원 가입**, 사우디 등 몇 국가들이 준회원이 됨.

. UAE의 OPEC 및 OPEC+에서 탈퇴 선언
GCC, OPEC 등 중동지역 국가들 간 연대성에 변화 보임.
특히 **사우디-UAE 간 약한 단층선이 형성되고 있음.**



2-1. 중동 국가들 간 단층선 변화 (2000~2026년 현재)



- ◆ 2015년 전후에 순니파 조직 **IS의 부상과 분쟁 격화**
(IS 외 여러 조직들의 부침과 갈등 현상)
- ◆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 1970년대 키프로스 문제, 2019년 러시아제 S-400 도입문제로 미국과 갈등.
- ◆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대서양 동맹 약화 현상
- ◆ 강대국들(미, 러, 중)의 '강대국 정치' '새로운 형태의 Divide & Rule' 현상
 - 세계 공공재 독점 국가(패권국) 부재 - 공급망 혼란
 - 트럼프의 미국: '세력권 정치' '강압적 패권' '거래적 실용주의'
- ◆ **이스라엘, The Greater Israel 정책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

- 이스라엘: 'The Greater Israel' 정책을 최근에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 보임.



시오니즘 창시자 테오도르 헤르츨은 팔레스타인에 세워질 유대 국가의 국경에 대한 아이디어는 타나크(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았음. '유대 국가의 지리적 범위는 다윗 왕국에 대한 성경 이야기에서 비롯'

'북쪽 국경은 카파도키아를 마주한 산맥이고, 남쪽 국경은 수에즈 운하다. 우리의 슬로건은 '다윗과 솔로몬의 팔레스타인'이다.'

. 오늘날 '나일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강 까지'

2-2. 20세기~2026 현재 중동 전쟁

2-2-1. 20C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 전쟁: 10년 단위 전쟁

- 1) 제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건국전쟁, 1948~49)
- 2) 제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 1956): 영국 패권 상실 (패권이동). 100년 단위 패권이동
- 3) 제 3차 중동전쟁 (6일전쟁, 1967)
- 4) 제 4차 중동전쟁 (용 키푸르 전쟁 / 라마단 전쟁 / 10월전쟁, 1973)

- * 이스라엘 - 이집트 캠프데이비드협정 (1979년)
- 이스라엘 - 요르단 평화협정 (1994년)

2-2-2. 20~21C 비교적 큰 갈등/분쟁/전쟁

- 1) 1차 이스라엘-레바논 분쟁(1978): PLO와 관련된 분쟁
- 2) 이란-이라크 전쟁(1980~1988)
이스라엘,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1981)
- 3) 이스라엘의 레바논 내전 개입(1982): PLO 관련 분쟁
- 4) 제1차 인티파다(1987~1993): 팔레스타인인의 대이스라엘 항거
- 5) 2차 이스라엘-레바논 분쟁(1982~2000): PLO와 관련된 분쟁. 오슬로협정(1993)
- 6) 제2차 인티파다(2000~2005): 팔레스타인인의 대이스라엘 항거
- 7)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2001.10.7~2021.8.30)
- 8) 미국-이라크 전쟁(2003.3.20~2011.12.8): 미국의 이라크 침공
- 9) 이란 핵 문제의 국제화(2002~2026 현재)

10) 2006년 가자-이스라엘 분쟁('여름비 작전')

**11)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2006):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입지 강화됨(헤즈볼라 제도권 진입, 이중적 지위)**

12)제1차 가자전쟁(2008~2009)

13)제2차~4차 가자전쟁(2012)(2014)(2021)

14)예멘 내전(2014년 시작): 일종의 '대리전 (Proxy war)'

15) IS와의 전쟁(2015~): 테러와의 전쟁, 시리아와 이라크의 내전과
내전의 국제화

16) 이스라엘의 2023년 제닌 공습

17) 제5차 가자전쟁(2023.10.7~ 2026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18) 미국&이스라엘, 이란 핵-군사 시설 공습(2025.6.13)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전쟁(2026.2.28~):

Pax-Americana의 지위는? 제국의 몰락? 이란 핵 문제?

호르무즈 통제 문제 및 원유 수송 문제

그 외 핵시설 공습, 상호 피랍, 테러, 항거와 저지.....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 전쟁, 분쟁, 갈등은 끊임없이 진행

* 20세기(냉전기)에 10년 단위의 전쟁이었으나 탈냉전기(1990년 이후) 3년 단위
이하로 그 주기성이 짧아졌으며, 최근에는 여러 전쟁, 분쟁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3.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3-1. 전쟁 일지

이스라엘-하마스,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23.10.7 ~ 2026 현재): Proxy war(1985~ 현재),
하마스-헤즈볼라-예멘의 후티반군은 이란과 '저항의 축' 형성.
조지W,부시 전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 규정
(2002.1.29)

미&이 - 이란 전쟁 일지

- 2024, 이스라엘, 시리아 내 이란 목표물 공습, 이란은 이스라엘 영토 보복 공격-
- 2025.6, 미&이스라엘, 이란 군사,핵 시설 공격(Twelve-day war)
- 26.2.28 핵협상 중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Epic Fury 작전)으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가족, 군 장성 등 다수 사망(트럼프: '더 큰 재앙인 핵전쟁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선제공격'이라 주장) - 명분이 결핍된 전쟁
- 2026.4.7: 잠정 휴전 ~ 6.11 이스라엘, 이란 맹폭.....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주요 분쟁 일지

- 1915년 ○ 맥마흔 선언
제1차 세계대전 후 아랍 독립 국가 건설 지지
- 1917년 ○ 벨푸어 선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민족국가 수립 동의
- 1948년 ○ 이스라엘 건국 및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 장악
- 1967년 ○ 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동예루살렘·요르단강 서안 장악
- 1987년 ○ 1차 인티파다(반·反)이스라엘 저항운동)
- 1993년 ○ 오슬로 평화협정 체결
• 이스라엘-PLO, 가자·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약속
•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병력·정착민 철수(2005년)
- 2007년 ○ 하마스, 가자지구 지배
- 2014년 ○ 이스라엘-하마스 '50일 전쟁'
이스라엘,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
- 2021년 ○ 알아끄사 모스크 갈등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약 200명 사망
- 2022년 ○ 베냐민 네타냐후 극우 연정 출범
- 2023년 10월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 7일 ○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민간인 살해·납치
- 8일 ○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 공식 선포 및 보복 공습
- 9일 ○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면 봉쇄 및 물자 공급 차단
- 17일 ○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아랍병원 폭발 참사
- 18일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
- 21일 ○ 하마스, 인질 2명 첫 석방,
가자지구에 첫 구호물자 반입

3-2.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선제공격) 명분

1) 이란 핵무기 개발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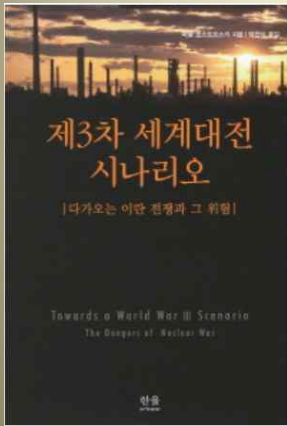
| 농축도(%) | 용도 | 위험도 |
|--------|--|----------|
| 0.7 | 채굴상태의 천연 우라늄 | 안전 |
| 3.5~5 | 원자력발전 연료 | 평화적 이용 |
| 20 | 의료.연구용 | 경계 수준 |
| 60 | 현재 이란 보유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 440Kg~460Kg, 핵폭탄 약 11여개 제조할 수 있는 양 | 핵무기 직전단계 |
| 90+ | 핵무기용 | 핵폭탄 제조단계 |

2) 에너지(석유) 통제(직접 언급하지는 않음) - 경쟁국 중국 통제?

호르무즈 개방 문제

- 아랍 석유 생산국에 미군 기지 배치
- 에너지 안보를 위해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 체제 구축
- 세계 최고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체포

3-3. 이란 핵 문제: 핵무기&미사일



원제는 『제3차세계대전 시나리오: 핵전쟁의 위험 (Towards a World War III: The Dangers of Nuclear War)>』(2011)이다.

저자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고리로 재래식 전략과 핵 전략을 융합한 **선제적 방어전쟁**, 즉 명백한 공격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에 따른 선제공격 전략을 이미 마련해 놓고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2001 핵태세검토 보고서>, <2010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 비확산이라는 명분 아래 핵 물질의 재고와 생산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필자는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은 확전으로 발전하고 결국 전 지구적 전쟁, 즉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3-4. 이란 핵-미사일 개발사

(핵과 미사일은 이란성 쌍둥이)

제1기: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시기

제2기: 1979년 이슬람혁명 ~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시기

제3기: 이란-이라크 종전(1988년 이후) ~ 현재

1) 제1기(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시기):

. 핵에 대한 관심: 1957년 Eisenhower's 'Atoms for Peace Program' 부터임 ("proposed agreement for cooperation in research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 Shah가 20세기말까지 핵전력 23,000MW를 목표로 핵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착수.

. 1959년 IAEA 정회원, 1968년 NPT에 서명, 1970년 비준함.

. 1974년 IAEA와 '포괄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는 동시에 이집트와 함께 유엔 총회에 '중동 비핵화 지대' 창출을 공식 제안함.

2) 제2기(이란-이라크 전쟁) 시기:

1980년대 중반부터 러, 중, 북한 기술지원을 통해 미사일 생산을 추구하기 시작.

1985년 3월 12일 처음으로 스킨드-B 미사일로 이라크의 키르쿠크, 바그다드 공격.

곧이어 당시 라프산자니 국회의장은 북한과 중국을 방문해 군사원조에 대한 협정 체결.

1987년 샤흐브 미사일 시리즈 개발 시작.

1988년 초 스킨드-B 미사일을 개량하여 사정거리 320 km 의 샤흐브-1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선언

3) 제3기(1989~현재)

1989.7: **파키스탄과 방위 협정 체결**하고 군사적인 연대 강화
(1990년대 초 이후 **핵의 자체개발을 강조하면서 핵연료 사이클 전방위 차원에서 핵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옴**)

1996: 터키-이스라엘 방위협정은 이란에게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작용

2002.2.20: **샤하브-3 실전배치(사정거리 1300Km)**

2002.8 : **반체제 단체인 이란국민저항협의회(NCRI :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가 **핵 의혹 제기**

“IAEA 에 신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테헤란 남쪽 지역의 나탄즈(Natanz) 우라늄 농축시설과 아락(Arak) 중수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이란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

2002: **부시정부(연두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2003.2부터 IAEA의 사찰이 시작됨

2004년 초: 누르, 나스르, 코사르 등 3종의 **신형 미사일 개발**
(사정거리가 170 km)

2008.7.9: 미-이스라엘 군사훈련 중, 이란은 **샤하브-3b 중형 탄도미사일(사정거리 1800~2000 Km)** 포함 미사일 10기 시험 발사
사정거리 **1,800 km의 샤하브-3a**도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8.8.17: **‘Omid 인공위성이 Safir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다’**
고 발표(지속적 경제봉쇄와 우주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과 부품조달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상징적 사건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능력 보유 의미

3-5. 이란 핵 위기론 대두(핵문제의 국제 이슈화) (2002년 이후 이란 핵문제 국제적 이슈화)

1. 반체제 인사들의 폭로 및 서방국들의 집요한 주장결과, **2002년 중반 이후 비밀 핵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됨.**
2. 대표적인 것이 (i) Natanz 우라늄농축시설, (ii) Arak의 중수발전소와 건설 중인 중수로 (40MW), (iii) Isfahan의 우라늄전환시설
3. 국제사회: 이란이 **완전한 핵연료사이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됨.
4. 이란은 **“평화적이고 자족적인” 핵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



1. **Bushehr 경수로:** 러시아의 기술지원 하 2009년 가동예정이었음(경수로). 이것이 이란의 첫 원자로로서 향후 10년 내 이란이 독자적 원자로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관심 받고 있었음.
2. **‘이란원자력기구’ (Atomic Energy Organization of Iran)의 핵프로그램:**
 - ① 대통령 직보기구 중 하나. ② 1990년대 약 200명의 과학자와 2000명의 직원이 근무, ③ 주요기능은 핵연료사이클에 관한 R&D로서 산하 5개 부서(연구, 핵연료생산, 핵발전소, 핵규제, 기획교육의회)중 ‘연구’ 및 ‘핵연료생산’ 부서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관장

이란 핵 위기론 대두

(비확산레짐과 이란 핵 개발)

(1) NPT: 매5년마다 평가회의

예) 2005년 5월: 제7차 NPT평가회의
(뉴욕 유엔본부, 188개국 참가)

‘북한과 이란이 비확산 레짐을 시험하고 있다’

북한: 1992.1.30 북한이 IAEA 핵안전협정에 서명
1993.3, 2002.10 두 차례 NPT 탈퇴선언
2009.4 영변 핵시설로부터 IAEA 사찰단 추방
2005.2월 핵 보유 선언

이란: 2002년 핵프로그램 의혹 받은 이후 NPT 회원국
지위 보유한 채 ‘평화적 목적’으로 핵 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이란은 1968년 NPT가입)

비교

이란 핵 위기론 대두 포괄안전조치(Comprehensive Safeguards)란?

NPT 제3조에 의거
(‘**비핵 보유국은 비확산 보증장치로 자국 핵물질에 관해 IAEA와 포괄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1. 특정국가의 ‘신고’ 핵물질 및 핵활동에 대한 검증을 가능케 하는 것
2. 기본적으로 재고 목록에 의존하지만 보완적으로 회계장부나 운용일지에 대한 감사, 혹은 IAEA가 현장에 설치한 열 봉인 및 카메라에 의한 감시 방법을 동원하기도 함.
3. NPT조약상 비핵국가에 속하는 총184국 중 147국이 IAEA와 ‘포괄안전조치’의 비준을 완료함.
4. **포괄안전조치 추가프로토콜 (Additional Protocol)**: 냉전종식 이후 북한 등 NPT 체제 내 비핵국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으로 IAEA가 회원국의 ‘미신고’ 핵물질 및 핵 활동 부재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립(2008년 1월 현재 80개국 비준)
5. 한국은 1975년 ‘포괄안전조치,’ 2004년 ‘추가프로토콜’ 비준 완료

(2)이란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실험, 호르무즈 봉쇄론

- 1) **이스라엘**: 08.6.17일 지중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미 해군 5함대도 7월 7일부터 페르시아만에서 군사훈련 실시.
- 2) 08.8.4일, 자파리(Mohammad Ali Aziz Jafari) 이슬람혁명수비대 최고 사령관은 만약 이란을 공격하면 **전격전 전술(중형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사용하여 호르무즈해협 봉쇄할 것**이라고 경고.
“**이란의 군대는 300 km 대함정용 신형 무기 사용하여 호르무즈해협 쉽게 고립시킬 수 있다**”고 언급
- 3)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석유공급의 1/5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송로임.**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50 km, 최대 수심이 190 m임.
이란은 해협의 중간에 위치한 섬 3개에 해상공격용 대포와 미사일 배치.

(3) 미국, 이스라엘의 군사 대응론 등장

1) 정밀 타격, 소규모 공격 시나리오


- . 미국: 이란의 핵 시설 대상 정밀 타격 계획(2016년 들어서서 북핵 선제타격론 부상함). 그러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대한 제한된 공습으로 공격목표를 변경하기도 함
- . 이스라엘: 이란 선제공격설을 지속적으로 제기. 지중해 등지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대규모 군사 훈련 실시.

Israel did not have an effective military option to hamper Iran's nuclear program...he(Ehud Barak, Israel's former defense minister and former prime minister) would wait to strike until Iran had committed to **arming a delivery system, leaving itself wide open to attack — a nerve-racking solution, but one with the best chance of success.**

- George Friedman. Stratfor(2015.8.25)

2) 반정부 조직 지원

- . 미 CIA는 서쪽의 쿠르드족, 북서쪽의 아제리족, 남동쪽의 발루치족의 종족단체를 통해 이란의 반정부활동 지원
- . 무자헤딘 할크(MEK), 쿠르디스탄의 자유생명당(PJAK), 순니파 조직인 준달라(Jundallah; 신의 군대. 시스탄-발루치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등 지원



Dariush tried to open the door but the person closed the door and started to shoot.

PRESSTV

TVs Report: Turkey deploys missiles on border with Syria

SAMSUNG

2011.1월 이란 핵 과학자 살해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부인
(이란 Press TV 화면)

3-6. 이란 핵문제 해결 위한 국제적 노력 (smart sanction or targeted sanction)

이란 핵 문제 해결 위한 관련 주요 행위자

1. UN 안보리 결의(각 국은 핵비확산이라는 전제하에 이해 관계에 따라 행동함)
2. 미국, EU 3국(영, 프, 독), IAEA, NPT
3. 러시아, 중국
4. P5 +1 과 이란

(1) 안보리 결의:

(수출통제, 금융제재, 여행제한, 여행금지, 화물검색 등)

유엔 안보리는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6회):

1696호(2006.7), 1737호(2006.12),
1747호(2007.3), 1803호(2008.3.3),
1835호(2008.9.27), 1929호(2010.6.9)

- ◆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 규범 수호를 위한 상징화를 넘어 대상국을 실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보다 가혹한 ‘포괄적 제재’임.
- ◆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 또는 목적 제재(targeted sanction)’: 이란에 대한 제재는 ‘스마트 제재’ 또는 ‘목적 제재’의 성격을 띠며.
- ◆ 최근 미국의 봉쇄가 풀린 쿠바, 이란을 비롯하여 아직도 지속되는 시리아, 러시아, 라이베리아, 수단, 코트디부아르 등에 대한 제재는 모두 ‘스마트 제재’ 혹은 ‘목적 제재’에 가까움.
- ◆ 이러한 느슨한 제재는 비록 강도와 범위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규범 위반국에 대한 응징을 상징화하고 국제사회의 규범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이는 제재가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임.

| | 수출통제 | 금융제재 | 여행제한 | 여행금지 | 화물검색 |
|--|---|---|---|-------------------------|-----------------------------|
| 1696호(생략) 1737호 (06.12.13) | <p>◎농축 및 재처리, 중수로 관련 활동미사일 체계 개발 관련 부품의 이란 수출 (관련 기술.서비스.지원 등) 금지</p> <p>◎NSG 및 MTCR 통제물품 수출 금지</p> | <p>◎이란 핵활동 유관 10개 단체 및 12명의 자연인 자산 동결</p> | <p>◎자산 동결 대상자(12명)의 자국 입국 및 경유 시 주의</p> | | |
| 1747호 (07.3.24) | <p>◎대이란 재래식 무기 판매 및 이전의 자제(관련 기술.서비스.지원 등)</p> <p>◎이란으로부터 모든 재래식 무기 및 관련 물자 구매 및 조달 금지</p> | <p>◎자산 동결 대상 13개 단체 및 자연인 15명 추가</p> <p>◎인도적 및 개발 목적 이외 신규재정 지원 금지</p> | <p>◎제재 대상자의 자국 출입국 및 경유 시 주의 및 제한</p> | | |
| 1803호 (08.3.3) * 5개 상임이사국 포함 14개 이사국 (인도네시아 기권) *조문이 20개, 결정이 6개항 | <p>◎핵 미사일 관련 대이란 수출 금지 범위 확대</p> | <p>◎자산 동결 대상 12개 단체 추가</p> <p>◎교역 위한 수출 신용, 보험 제공 등 신규 재정 지원 시 주의</p> <p>◎Melli, Saderat 은행 포함 자국 내 이란 은행 활동 유의</p> | <p>◎여행 제한 대상자 13명 추가 지정</p> | <p>◎여행 금지 대상자 5명 지정</p> | <p>◎이란행.발 항공 및 선박 화물 검색</p> |

1835호
(08.9.27)

- * 5개 상임이사국+독일(P5+1):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를 지체없이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란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 * 미, 영 등 서방국: 유엔 안보리결의와 별도로 핵활동 중단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제재를 취함

1929호
(10.6.9)
*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2개
국 찬성, 2개국
(브라질·터키)
반대, 레바논
기권
* 조문이 38개,
결정이 15개항

- * 이란 은행 제재, 중앙은행 포함 모든 이란 은행들의 거래 감시, 이란에 대한 유엔 무기금수 조치 연장
- * 전차 등 중무기 판매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의 지원 금지 (금지 대상 물품을 이란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조사하거나 해당 물품 압류)
- * 40여개 이란 기업 및 기관, 이란 핵기술센터 책임자 자바드 라히키는 '블랙 리스트'에 추가(해외여행 금지, 자산 동결 등)
- * 40개 신규 제재 대상에는 이란혁명수비대 관련 15개,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 연루 혐의 받는 곳 22개, 이란 해운(IRISL) 관련 3개임

(2) 국제사회-이란 간 해결 노력(2002-2004)

비밀 핵개발 폭로

- ① 2002.8월, 국가저항위원회(이란 반체제 단체): Natanz 핵연료발전소 및 Arak 중수발전소 건립을 폭로
- ② 2004년 2월, Abdul Khan(파키스탄 핵무기 프로그램의 아버지)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란에 원심분리 기술을 제공했다고 밝힘



국제사회의 이란 핵 문제 해결 노력(성과)

- ① 테헤란 합동선언문 (EU3국-이란, 2003.10.21)
- ② IAEA '추가프로토콜' 서명 (2003.12.18)
- ③ 파리합의문 (EU-이란, 2004.11.15)
- ④ Fuel Swap Proposals(2009. 10.)
- ⑤ 러시아의 'step-by-step plan' proposal(2011.7.12)

1) 테헤란 합동선언문 (EU3국-이란, 2003.10.21):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과 이란 외무장관

(i) '추가프로토콜' 서명

(ii)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의 “자발적” 중단을 약속. EU3는 이란 핵 **에너지의 평화적 활용권 인정**; '추가프로토콜'로 인한 참여국의 주권 및 안보 저해 방지; 중동지역 非WMD지대건립 등 지역안정을 위한 양측간 협력 약속.

2) IAEA '추가프로토콜' 서명 (2003.12.18)

IAEA가 2003년 들어 기존의 '포괄안전조치협정'으로는 충분한 사찰이 불가능하다는 결의문을 수차례 발동.

“이란의 미신고 시설 및 안전조치협정 위반”을 비난.

이란정부는 서명과 함께 의회의 비준 시까지 이에 준하여 준수할 것임을 속

3) 파리합의문 (EU-이란, 2004.11.15)

이란: 비준前이지만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추가프로토콜' 이행; 장기적 해결을 위한 협상 중 핵활동 중단 범주 **“자발적”** 확대 (가스 원심분리기 및 그 부품의 제조, 수입, 조립, 설치, 실험, 작동 등); IAEA의 검증 및 사찰 요청 수용을 약속.

EU측: (i) 이란의 결단이 **“자발적”** 신뢰구축방안임을 인정; (ii) 약속이행 관련 IAEA 사무총장의 대 이사회 보고서 예의주시; (iii)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문의 2대 조건으로 이란 핵프로그램의 **평화적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명, 이란에 대한 EU의 핵, 기술, 경제 지원 및 안보확약 설정** (iv) 핵활동 중단에 대한 검증 완료 시 **경협 협상 재개 및 이란의 WTO가입 지지 약속**

4) The P5+1과 이란: Fuel Swap Proposals(2009년 10월)

핵 연료 교환 방안에 대한 합의: 이란 보유 농축우라늄 해외 반출 방안 및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저농축우라늄 반입 방안 합의.

이란은 무기급은 되지 않으면서 테헤란연구원자로(Tehran Research Reactor)의 연료막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의 교환 조건으로 저농축우라늄을 포기하기로 합의함.

5) 'step-by-step plan

서구 국가들이 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한다는 조건으로 이란은 핵 활동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답을 내놓는다는 데에 합의할 것'

(3) 이란 핵문제 타결 이전, 해결 위한 국제적 노력

비확산 레짐의 한계와 이란 리더쉽변동에 따른 핵협상 타결

① 하타미 정부에서 아흐마디네자드 정부(05.8 대통령 취임):

- . 취임 즉시 의회가 비준하지 않은 '추가프로토콜' 수용 중단
- . 05년 8월: Isfahan 우라늄전환시설 핵 활동 재개
- . 06년 2월: 다시 농축 시작함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에서 로하니 정부(중도개혁파): 핵 타결

② 이란의 벼랑끝 외교에 대한 P₅+1(E3+3)의 사탕과 채찍

- 사탕: 농축활동 중단 및 '추가프로토콜' 이행 조건: 경수로 지원, 핵연료 지원, WTO가입 지지, 민간항공기 부품 수입허용 등 경제 지원을 골자로 한 인센티브 패키지 제안
- 채찍: 우라늄 농축 중단 및 재처리 중단 요청하는 안보리 결의문 6회 채택

. 2010.10부터 3차례 회담 후인 2014.11.24에 6개월 잠정 합의안 도출.

'공동행동계획 핵심요소' 합의(2015.4.2),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합의(2015.7.14)

(4) 이란 핵협상 타결 이전의 주요 관련국 입장

비핵화에 대해선 의견 일치 국익에 따른 의견 불일치
(미, EU : 러시아, 중국: 사우디, 이스라엘)

① 미국

- ◆ 2002년 이란핵 문제 부상 이후, EU의 역할에 의존
- ◆ 2002년 연두교서(부시정부):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
(‘극소수 비선출 인사들이 자유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억압하는 한편 WMD를 추구하며 테러를 수출하는 나라’)
- ◆ 2003년 5월,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발족
- ◆ 2005년 6월 행정명령 제13382, 2006년 10월 'Iran Freedom Act' 등:
이란의 핵 및 미사일 관련 개인 및 단체에 관한 별도의 경제제재를 입법화
- ◆ 2006년 이란 핵문제 유엔안보리 상정 이후 P5+1(미,러,중,영,프,독)이 하나로서 역할 하기 시작
(유엔안보리 결의에 적극적)

오바마 정부 외교정책 기조: Liberal Internationalism, Leadership과 cooperation 강조

- 2010년 10월 발표한 '4개년 외교·개발 검토 보고서'(QDDR,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미국 외교와 개발협력의 핵심 원칙으로 세계적 리더십의 회복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 제시
- 2009년 1월 취임연설에서도 “미국 안보는 힘으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명분의 정당성(justness of our cause)과 모범의 힘(force of our example), 겸양과 절제의 특성(tempering qualities of humility and restraint) 갖추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할 때, 굳건한 안보가 보장된다”고 강조 (Barack Obama, Inaugural Address , 20 January, 2009)
-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 1996년 9월 UN총회에서 채택) 비준 추진(원자로를 갖고 있는 44개국이 모두 서명·비준해야 발효되지만 북한과 미, 중,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음)
- 국제적 다자협력과 공동안보 강조(김성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월슨주의, 미국의 이해와 명예를 중시하는 잭슨주의 전통 유지. 국제기구의 효용성을 신뢰하고 약소국가를 배려하는 협조적 국제주의, 제도주의와 다자주의, 국제적 공조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성향(남궁곤).
- 공동이익(shared interests), 스마트 파워(smart power): 민간의 힘(civilian power)과 군의 힘(military power) 이 조화를 이루는 힘.
- 오바마 정부는 “Why do they hate us?”라고 묻고 public diplomacy를 강화. participatory diplomacy, Trac 2 diplomacy, multilateral diplomacy를 중시함.

➡ 이란 핵 협상 이끌어 냄.

- 2010년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미국의 안보정책 추진에 있어서 '관여'(engagement)를 강조함. **현실주의 입장**
 “폭력적 극단주의와의 전쟁, 핵무기 확산 방지, 핵물질의 안전성 확보,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후변화와 무력분쟁·전염병에 대한 협력적 해결책 마련 등과 같은 공동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공동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제도를 강화하는데 미국의 관여를 집중시켜야 한다.”
- 안보 측면에서는 공세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경향**: 선택적으로 자원을 투입한다는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의 전략**. 하드 파워(hard power)의 증강 필요성 강조. 미군의 규모(size), 힘(strength) 세계적 배치(global reach).
- **지역패권(regional hegemony)전략 > 세계패권(global hegemony)전략**: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역할 강조.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 참석해 **mutual respect, common interests & shared values**에 기반 한 동등한 파트너십의 구축을 강조함.
- '**핵 없는 세계(Nuclear Free World)**'를 외교안보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추진.
 이란 핵문제: **diplomacy** 강조
 북한 핵문제: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를 주장하면서도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endurance)**'의 전략.
 비핵화(denuclearization) < 비확산(nonproliferation)
- “**철학적으로 본다면 오바마는 한 쪽 어깨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다른 어깨에 현실주의를 메고 있다**”(John Ikenbery): **comprehensive liberal internationalism**

미국 독자 노력

| | 이란제재법(1996 년) | 포괄적이란제재법(10 .7.1) | 행정명령 13590호(11 년) | 국방수권권(12 년) | 이란위협감소 및 시리아인권법(12 년) |
|-------|---|--|--|---|---|
| 제재 대상 | 1. 이란 석유자원개발에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 2. 이란의 WMD·재래식 무기 증강에 기여한 외국 개인 및 기관 | 이란제재법의 제재 대상(내용)에 다음 내용 추가 3.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하여 이란의 정제유 국내 생산에 기여한 경우 4. 이란에 정제유를 제공하거나 이란의 정제유 수입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 관여한 경우 | 1. 이란 내 석유 자원 개발에 100 만 달러(12 개월 내 총 500 만 달러) 이상의 물품/서비스/기술 등을 제공한 경우 2. 이란의 국내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유지/확대에 25 만 달러(12 개월 내 총 100 만 달러) 이상을 기여한 경우 | 1. 외국 중앙은행 등이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원유 또는 원유제품의 매매를 위한 금융거래에 연관된 경우 2. 외국 금융기관이 이란으로부터 원유 및 원유제품의 구매를 위한 금융거래를 행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포괄적 이란 제재법(CISADA)과 국방수권법(NDDA 2012) 강화 및 신규 제재 부과 |
| 제재 조치 | 다음의 6개 조항 중 2개 이상 부과 ① 미 수출입은행의 대출, 차관, 신용보증 거부, ② 미 군수기술의 이전 금지, ③ 미국은행의 연 1,000 만 달러 이상 대출 금지, ④ 미 국채전문 딜러 및 정부기금 리포지터로서의 서비스 금지, ⑤ 미 정부 조달 금지, ⑥ 대미 수출 금지 | 이란제재법의 제재조치 ①~⑥ 내용에 다음 내용 추가 ⑦ 미국내 외환시장접근금지 ⑧ 미국 은행시스템접근금지 ⑨ 미국 내 자산거래 금지 * 한국: '대이란 유엔안보리결의안 1929 호 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2010.9.8) | ①~⑤ 중 어떤 것 (any) 도 부과할 수 있음. ⑥~⑨ 를 필요에 의해 부과 | 미국 내 대체 계좌의 개설 또는 유지 금지 | 2005년 6월 행정명령 제 13382호, 2006년 10월 'Iran Freedom Act' 등 |

② 러시아

- **이란:** 러시아가 중앙아시아, 걸프만, 트랜스코카서스, 카스피해 등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
러시아: 이란은 중국, 인도에 이어 **제3위 무기수입국으로서**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며 중동평화 보증국인 러시아의 위상강화, 유라시아 내 견미 등에 유용.
- 1995년, **8억 달러 규모의 Buser 1000 MW 경수로 프로젝트 건립 계약.**
- 2005년 2월 부시-푸틴 정상회담에서 제3국 경수로 지원의 경우, **폐연료 반환** 등의 조치를 통해 **확산위험을 완화하는 데에 합의**
- 부-푸 정상회담 3일 후 러시아는 이란과 향후 10년간 **폐연료 반환조건으로 1000MW경수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기로 합의**

③ EU

- **이란-이라크 전(1980-88) 이후 이란-EU국가들 간 관계 급진전됨**
2000년 이후 **하타미**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방문하였고, 이들 국가들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입국임
- **2002년 이후, 이란 핵에 대해 과거보다 강경 입장으로 선회**
2008년 6월 EU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 단체 및 개인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
- 이란의 최대 은행인 **Bank Melli**에 대해 함부르크, 런던, 파리 지사 폐쇄 요청. 여타 12개 이란 군수업체에 대해서도 유사 제재를 부과.
또한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관장하는 군부 및 원자력기구 주요인사 14명에 대한 재산동결 및 입국금지령

④ 중국

이란: 자국과 비슷한 유형의 산업화 과정을 겪고 있는 중국, 인도와의 협력 도모


중국: 이란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국

⑤ 이스라엘

- ❖ 반이스라엘 정서가 가장 강하고 팔 평화과정을 어렵게 하는 역내 국가 이란의 핵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생화학 무기 보유 및 사용 가능성을 가장 우려.
- ❖ NPT회원국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제재를 요청할 입장은 아님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 회원국이 아님)
- ❖ 1981년 6월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폭파한 데 이어 2007년 9월에는 시리아의 동북부 사막에 있는, 핵시설로 의심되는 건물을 기습 공격함
- ❖ 2007년 9월 이스라엘의 시리아 기습은 중동 내 또 다른 반이스라엘 국가의 핵무장을 우려한 선제공격으로 이해됨

(5) 이란 핵협상 타결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 | 이란 핵협상 주요 일지 |
|--------------|--|---|
| 2002년 8월 | ● 이란 반정부 단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폭로 |  |
| 2005년 8월 | ● 이란, 평화적 목적 우라늄 농축 재개 발표 IAEA,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위반 지적 | |
| 2006년 12월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작 | |
| 2013년 10월 | ● 중도파 로하니 정부 출범 뒤 제네바서 첫 이란 및 P5+1국 협상 | |
| 2015년 3월 31일 | ● 큰 틀의 정치적 타결 선언. 6월 30일까지 최종합의문 도출 합의 | |
| 7월 14일 | ● 13년 만에 협상 타결 | |

- . IAEA가 이란 군사시설 포함 핵무기 제조 의심되는 모든 시설 사찰 가능
- . 신형 원심분리기 중심의 이란 핵 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 금지.
- . 이란은 향후 10년간 나탄즈에서 신형 원심분리기의 우라늄 농축 할 수 없으며, 다단계 방식이 아닌 최고 2단계까지의 기계적 실험만 허용됨.
- . 이란이 협상안 이행 않을 시, 65일 안에 제재복원,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 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함.

(6) JCPOA(2015.7.14) 주요 내용

- . JCPOA는 서문, 전문과 통칙(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핵(Nuclear), 5개 부속서(Annex)로 구성
- . 그 중 핵 (Nuclear) 부분은 다시
 - A. 농축, 농축 R&D, 비축,
 - B. 아랍, 중수로, 재처리,
 - C. 투명성과 신뢰 구축조치(제재, 이행계획, 분쟁 해결기제)로 구성
- . 5개 부속서(Annex)
 - 부속서 I (핵 관련 조치)
 - 부속서 II (제재 관련 양허: EU, 미국)
 - 부속서 III (민간 핵협력)
 - 부속서 IV (공동위원회)
 - 부속서 V (이행 계획)

JCPOA의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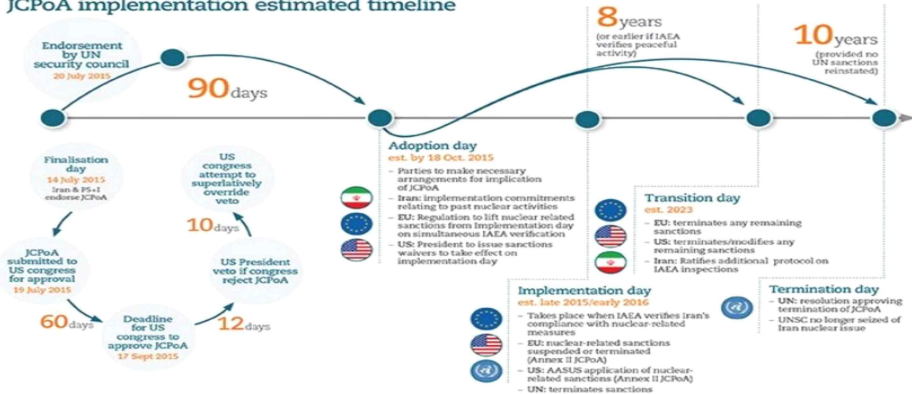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오직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핵 프로그램 및 핵에너지 권한을 갖는 대신에 이란이 핵활동을

억제하는 것을 IAEA가 검증하면 미국 및 서구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

(7) JCPOA 이행 일정

JCPoA implementation estimated timeline



로드맵 1단계~4단계, 채택일, 이행일, 전환일 등 이행 일정

| | |
|------------|--|
| 2015.7.14 | <p>. JCPOA의 부속서 V 이행계획(Implementation Plan)의 A. 최종일(Finalisation Day)에 따라 JCPOA에 서명.</p> <p>. 2015년 7월 20일 유엔안보리는 JCPOA에 서명한다는 결의를 채택함.</p> <p>. 이란은 IAEA와 '과거와 현재 미해결 쟁점 해명 로드맵(Roadmap for Clarification of Past and Present Outstanding Issues)'에 합의.</p> |
| 2015.8.15 | <p>◎ <로드맵: 1단계>(Roadmap: step1).</p> <p>. 로드맵에 따라 이란은 IAEA에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거와 현재의 미해결 쟁점을 해명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p> |
| 2015.9.8 | <p>◎ <로드맵: 2단계>(Roadmap: step2).</p> <p>.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과거와 현재 미해결 쟁점에 대해 이란이 제공한 정보의 불명료한 점에 대해 IAEA는 이란에 질문지를 제출함. 7월에 IAEA와 이란이 서명한 로드맵에 제시된 종료일 1주일 전에 제시된 것임.</p> |
| 2015.10.14 | <p>. 이란, JCPOA 재평가과정(review process)을 이행함.</p> <p>. 이란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JCPOA의 이행을 승인함. 헌법수호위원회는 하루 후에 협정에 대한 '이란 의회 최종 투표(Iranian parliament's final vote)' 결정함. JCPOA는 의원 161명 찬성, 50명 반대, 13명 기권으로 비준을 받음.</p> |

| | |
|------------|---|
| 2015.10.15 | <p>◎ <로드맵: 3단계>(Roadmap: step3).</p> <p>. IAE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의 미해결 쟁점 관련 모든 활동을 이행했다고 확인함. IAEA와 이란이 7월에 서명한 로드맵에 제시된 이러한 활동들은 기술전문가들과의 만남, 기술적 조치, 테헤란에서의 여타 논의를 통하여 IAEA가 지적한(identified) 흑시 있을 불명료한 것들을 포함함.</p> <p>. IAEA는 2015년 12월 15일까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미해결 쟁점에 관한 최종 평가서를 만들 것으로 기대됨.</p> |
| 2015.10.18 | <p>◎ <채택일>(Adoption Day).</p> <p>. 아랍 원자로 현대화 계획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미, 중이 공동 의장) 멤버들은 그 계획에 대한 향후 단계를 토의하기 위해 2015년 9월 14일 처음으로 회합하고, 10월 18일을 '채택일'로 한다는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함. 본과위는 2015년 11월 13일에 이에 대한 큰 틀(framework)을 발표함.</p> <p>. 이란: 10월 15일에 로드맵의 이란 이행 분야를 완료하고 추가프로토콜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이란의 의향을 IAEA에 통고함.</p> <p>. EU: '이행일(Implementation Day)'에 효력을 발효할 핵 관련 EU의 경제적, 금융적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입법 틀(legislative framework)을 채택함</p> <p>. 미국: 제재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단계(preparatory steps)에 적합한 기관(agencies)을 요청하는 메모랜덤(Memorandum)을 발표함.</p> |

| | |
|------------------|---|
| <p>2015.12.2</p> | <p>◎ <로드맵: 4단계>(Roadmap: step4).</p> <p>. 정책관(Director General)은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s)가 제기한 행동을 위한 과거와 현재 미해결 쟁점 결의(resolution of past and present outstanding issues for action)에 관한 최종평가서를 제출함.</p> <p>. 2015년 12월 15일, 운영위원회는 미해결 쟁점에 대한 IAEA의 최종 평가서를 수용하기로 승인함.</p> |
| <p>2016.1.16</p> | <p>◎ <이행일>(Implementation Day)</p> <p>. UN: JCPOA에 서명한 UNSCR 2231에 따라, UNSCR 1696, 1737, 1747, 1803, 1835, 1929, 2224의 규정들은 종결되었으나, JCPOA에 대한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 재부과하기로 함.</p> <p>. 이란: 현존 핵 시설과 인프라를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들을 이행했고, 추가 프로토콜과 수정된 코드3.1(modified Code 3.1. 부속서 V. C. 15 참조)을 적용하기 시작함.</p> <p>. IAEA: 이란이 부속서 V. C. 15 조치들을 이행하고 있다고 입증함.</p> <p>. EU: 일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EU규정(EU Regulation)이 시행됨.</p> <p>. 미국: 제재와 집행명령(Executive orders)을 해제하는 임시포기서 (Temporary waivers)가 시행됨.</p> |

| | |
|--------------------------------------|---|
| <p>2016.2 ~ 2016.7.14 현재</p> | <p>◎ <이행일>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관련 제재 해제 이후, 이란은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회?)와 사전 동결자산(최소 총 1000억\$)에 접근할 수 있게 됨. 이행일 다음 날에 이전의 많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이 시작됨. . 이란은 중수로(heavy water) 32미터톤(metric tons)을 미국에 수출했다고 발표. . 엔안보리결의 2231호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보고서 <p>CPOA 서명 1주년 기념일에 앞서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은 UN안보리결의 2231호(2015)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JCPOA 이행과 관련된 여러 절차, 확인 등이 있었음. |
| <p>2016.7.14</p> | <p>◎ JCPOA 서명 1주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동안의 JCPOA의 이행에 관해 칭찬과 비판이 있었음. . 이란은 더딘 경제회복에 대해 불만이었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란의 미사일시험발사 같은 행동에 불만이었음. |
| <p>2023.10.20</p> | <p>◎ <전환일>(Transition Day): 채택일로부터 8년째 되는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정적 제재는 모두 영구 해제됨 . 이란: 추가프로토콜에 비준할 것인가? |
| <p>2025.10.20.</p> | <p>◎ 유엔안보리결의 종료일(UNSCR Termination Day): 채택일로부터 10년째 되는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UNSC는 JCPOA 서명 결의를 종료함 . EU: EU의회규정(EU Council Regulation) 267/2012와 의회결정(Council Decision) 2010/413/CFSP의 모든 잔여조항(remaining provisions)을 종료함. |
| <p>2026 이후</p> | <p>◎ 확대된 감시와 제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년: IAEA의 신속한 접근 관련(access concerns) 결의를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메커니즘 구축 . 20년: 원심분리기 로토스와 벨로우(rotors and bellows)의 봉쇄 및 감시 . 25년: 우라늄석 농축 감시 |

(8) JCPOA에 대한 행위자의 평가

1. 긍정적 입장:

- 미국:
- 유럽 국가들: 신흥 투자 및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이란에 적극적으로 접근.
'새로운 협력,' 최소 10년 동안은 '강건한 협정(robust agreement)'이 될 것, 협정 이행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extremely vigilant),' 국제외교의 '하나의 중요한 성공(an important success),' '역사적 성과(historic breakthrough),' 세계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make our world a safer place),' 경제적 이익에 '진정한 기회(real opportunity)'가 될 것 등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 중국: '포괄적 협정의 가장 중요한 성취는 국제 핵비확산 체계(international nuclear non-proliferation system)가 지켜졌다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국은 특별하고 건설적인 역할(a unique and constructive role)을 할 것'

- 러시아 : 푸틴은 ‘오늘 우리는 **안심의 한숨(a sigh of relief)**을 쉬게 된 것이 확실하다’ 고 했고,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도 ‘**중동, 북아프리카, 걸프의 전반적 상황에 좋은 영향(favorably affect)**’을 미칠 것
- 터키와 이집트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
- 미국의 주요 대학 중동학 및 국제관계학자 73명은 ‘**이란과의 핵협상: 지역안정에 플러스가 될 것(The Nuclear Agreement with Iran: A Plus for Regional Stability)**’이란 제목의 성명서의 첫 문장에서 “**이란과의 핵협상(JCPOA)은 부정할 수 없는 비확산 이익을 넘어서서 중동의 안정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발걸음이 될 것**”

- **이스라엘** 수상 벤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는 가장 강력하게 부정적.

. 베긴-사다트 전략연구센터(Begin-Sadat Center for Strategic Studies)의 소장인 인바르(Efraim Inbar)

교수: 다음 6가지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 표명

America the weak, nuclear legitimacy, proliferation, Iran force projection and terrorism, balance of power, conflict with Israel

- **걸프 아랍국가들과 미국의 협상 반대파들은 'JCPOA가 이란에게 농축프로그램의 보유를 허용했다'고 주장.**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터키가 핵 무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동에서 핵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

(GCC 6개국 중 **쿠웨이트와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약간 다른 입장)

- **미국 내 여론 조사: 긍정-부정 반응이 반반으로 나옴**
- **이란 내 여론 조사: 초기 긍정 반응에서 부정 반응으로 이동(?)**

(9) JCPOA 이후 아랍국가들의 입장



자료: Kalout 2015, 23.

- **친이란 블록:**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내 주요 정치 분파, 예멘의 반정부 세력
- **친사우디 블록:** 걸프연안국, 요르단, 모로코
- 친사우디 블록 내 실용주의 입장: 쿠웨이트, 카타르
- **제3의 입장:** 이집트, 알제리, 리비아, 수단
- **중립:** 오만

Hussein Kalout는 JCPOA는 크게 보아 지역적,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인 긍정적 변화(fundamental positive shift)'를 예고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주요 아랍 국가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 그는 JCPOA에 대한 아랍세계의 반응을 서로 다른 정치적 전망(political vision)과 중동에서의 지전략적 이해(geostrategic interests)에 따라 세 그룹(5그룹)으로 분류함.

4. 제1기 트럼프 정부, JCPOA 탈퇴(2018.5)

- 핵 프로그램 전면 중단
-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 시리아 내 이란군 완전 철수
-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무장세력 지원 중단
- 레바논, 이라크, 예멘 내 개입 중단(Proxy 세력 지원 중단)
- 사우디·이스라엘·미국에 대한 위협 중단
- 테러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중단
- 인권 개선과 억류 외국인 석방 등

→ 이란, '협상은 하겠지만 강요에는 응하지 않는다'('굴욕적 항복 요구' 거부)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JCPOA 탈퇴를 비판하고 재협상하겠다고 했으나 적극적이지 않았고, 이란도 소극적으로 대응

↓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서서 재협상 시작했으나 협상 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핵시설 공습

5.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미국-이란 전쟁(2025.6.13)

- 이란에 '무조건 항복' 요구(2025.6.18) -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습(2025.6.13)

미국, B-2 폭격기 이용하여 이란 핵시설(나탄즈, 포르도, 이스파한) 폭격(2025.6.22)

❖ 미국&이스라엘, 전면적 이란 공습(2026.2.28 ~ 6.22 현재 ~): 미-이란 전쟁 시작

❖ 잠정 휴전(26.4.7)

❖ 이스라엘, 가자지구 맹공격으로 초토화, 레바논 헤즈볼라 지속적 공습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맹폭(6.10)



'휴전과 전쟁'이 반복적으로 진행 중임
(쉬운 전쟁 시작, 어려운 종전)

6. 국제질서 및 중동 국제질서, 동북아 질서 변화: 구성주의적

6-1. 강대국 정치 부활: 21세기형 분할 점령(divide and rule) 규칙 형성 중?

● 미국:

- ▶ 오바마 정부 이후: 2011년 말부터 대전략(Grand Strategy)의 하나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인도)태평양 세기(Pacific Century) 구축 시도. 미국 중심의 아.태(인도대평양) 지역 안보 질서 형성 중.
- ▶ 중국의 일대일로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 BRICS, SCO에 대응하기 위해 가치동맹, 경제동맹, 첨단기술동맹, 4개국안보대화(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미.인.일.호주) 형성 진행.

➤ 미국-인도 주도 안보보좌관회의 개최(2023년 5월, 사우디): 2차 QUAD(사우디 포함하는 '서아시아 QUAD+' 회합).

① '유럽의 NATO + ② 서아시아의 QUAD+(I2U2+. 인도, 이스라엘, USA, UAE + 사우디아라비아) +

③ 인도태평양의 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연결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힘을 통한 평화'

2기 트럼프 - 베네수엘라 마두르 체포, 핵 협상 중 이란 침공, 그린랜드 미국화 언급, 쿠바 레짐 체인지 할 것 주장

➤ 바이든: '새로운 리더십 회복' **JCPOA 재협상과 재협정할 것**이라 주장했으나 실현하지 못함.

➤ 주한 미 사령관의 '한반도 거꾸로 지도'(거대한 함정), '단검' 논란 등 '전략적 유연성(전략적 확실성과 전략적 모호성)' '전시작전권 반환'을 둘러싼 논쟁.

- 러시아(푸틴): 우크라이나 침략 - 러-우 전쟁(2022.2.24 ~ 2026.6.22 현재 ~ ?)

특별 군사작전, 3일 내 승리 장담(72 시간 내 키이우 점령 장담)

- 중국(시진핑):

- 2001년에 중국 주도의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출발 - NATO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정치, 경제, 안보 협력기구
- 일대일로 정책 강력 추진
- 대만 문제에 적극적임: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 언급, '투키티데스 함정' 언급

● 인도:

- **21세기형 비동맹 외교:** BRICS와 SCO에 가입, 인도태평양 QUAD의 한 구성국,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가입:
- **Hedging Strategy + 스케이팅 전략:** 인도와 이스라엘, 사우디, UAE, 튀르키예, 이집트 등 서아시아와 중동의 중견국들은 **편승외교보다는 균형외교** 또는 한 쪽에 한 발과 무게중심을 두고, 최소한 발 하나는 다른 쪽으로 뻗치고 있음(**돌고래-범고래 전략, 스케이팅 전략**). 그것이 중견국으로서 국가이익(안보이익, 경제이익) 극대화 방안이라 판단하고 있음.

6-2. 중동지역에서의 21세기 패권 경쟁과 중동 국가들의 대응: 급변하는 국제관계

- ❖ **미-중 패권 경쟁**: 미국과 중국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동에서도 '내편으로 끌어들이기' 경쟁을 하고 있음
'일시적 사랑싸움'인가, '새로운 짝짓기'인가?
- ❖ **중동 중견국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사우디, 이스라엘, 이란, UAE,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중동의 중견국들은 한쪽에 편승하지 않고, 자국의 안보이익과 경제이익을 쫓아 '새로운 짝짓기'를 시도
- ❖ **이스라엘의 Greater Israel 과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 창설 72년만인 2020년 이스라엘-UAE 아브라함협정에 이어 모로코, 수단,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체결. 사우디는 아직 아브라함협정 체결 않음.

6-3. 기존 국제질서 변화 현상: 구성주의적

(‘사랑은 움직이는 것?’ - ‘국제관계도 계속 움직인다. 새롭게 구성된다’)

- 1) UN 등 국제기구 역할 축소, 무력화 현상: 각자도생의 다극(무극) 국제체제로 변동 중?
- 2) 대서양 동맹(NATO)의 약화(분열, 해체?)와 BRICs, Global South 국가들의 새로운 연대 강화, 북-중-러의 연대 강화되고 있음.
 - 24년 1월, 이란, UAE, 이집트, 에디오피아가 BRICs 정회원 가입,
사우디 정회원국 지위 획득 보류
 - 10여년 이상 중동평화 여부의 '린치핀' 역할을 해왔던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 예멘 내전에서 대리전(proxy war)을 주도했던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 했으나 미&이스와 이란 전쟁에서 재 갈등 현상 보임.
-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근 NATO-IP4(한, 일, 호주, 뉴질랜드) 협력 강화 움직임, 한-NATO, 한-EU 경제-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 등 국제관계의 급변현상 보임.

4) 북-중-러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 미-중 정상회담(26.5.14)에서

- 시진핑 주석: '투키티데스 함정'(세력전이론) 발언. 그 외 '공존' '원원"동반자' 발언, '대만문제' 경고

❖ 중-러 정상회담(26.5.20)에서

- 포괄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심화(포괄적 파트너십, 전략적 협력), 새로운 세계질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부정하고 다극체제로 전환), 중국에 석유, 천연가스 안정적 공급
- 중국, '글로벌 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 북-러 정상회담(24.9):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북한군의 러-우 전쟁 파견

❖ 북-중 정상회담(26.6.8)에서

- '비핵화' 언급없는 전략적 협력 강화 - '북핵 보유' 묵인?
- 반미 연대 강화(북-중-러 연대 강화)
- 북-중 국경 일부 개방- 경제 관계 복원 및 강화

최근 몇 년 간 북-미, 한-러 간
정상회담 없었음.

새로운 국제질서, 동북아 질서
형성에 한국과 북한이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8. 재편되고 있는 국제관계 속 한국의 대외정책과 평화

8-1. 중동 정세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 ◆ 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발생했고, **‘분쟁(전쟁)과 평화’**는 상호 교차해왔음
- ◆ 오늘날에도 세계 어느 곳에선가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 **세계사는 ‘분쟁과 평화’의 역사임**
 - 분쟁은 승자-패자 관계없이, 분쟁 당사자들에게 죽음, 부상, 복수심, 고통, 전쟁 준비라는 불행을 안겨줌.
 - 따라서 분쟁 발생했을 때 **분쟁을 관리하고 평화 관계로 유인해야** 하며, 더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평화구축 방안**을 찾아내야 함.

8-2. 평화학자들의 평화학

갈통(Galtung):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 소극적 평화(\leftrightarrow 소극적 폭력), 물리적 평화:

- 전쟁을 비롯한 폭력이 없이 조용한 상태.
- 힘으로 질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순응하고 침묵하는 평화(패권안정론).
- 그러나 깨지기 쉽고 전쟁 직전의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상태.
- 가끔 발생하는 무력 충돌은 소극적 평화의 근본적 한계를 보여줌.

-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구조적 평화(↔구조적 폭력)와 문화적 평화(↔문화적 폭력)
 - **구조적 평화:** 전쟁이 일어난 원인, 즉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문화적 배제 등을 폐지하고 적절한 제도와 기구로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필요(needs)가 충족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
 - **문화적 평화:** 구조적 평화를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하게 하는 태도와 관행이 내면화된 상태.
- 소극적 평화는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 없이는 그 한계가 명백하고, 폭력의 위협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 있음

바라쉬(David P. Barash)와 웨벨(Charles P. Weibel):

- 평화 구축 방안으로 '소극적 평화'(전쟁 예방) 구축과 '적극적 평화의 구축'을 제시
 - 전자: 평화운동, 외교와 협상 및 갈등 해결, 군비축소와 군비통제, 국제협력, **힘(세력균형)을 통한 평화**, 국제법, 윤리적·종교적 시각을 통한 평화 구축 의미
 - 후자: 인권, 생태학적 행복, **경제적 행복(경제 지원)**, 민주주의 운동(**민주평화론?**), 국가적 화해, 비폭력

* **한반도와 중동,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8-3.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 **스케이팅 전략, 헤징 전략 외교**: 중동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적 수준에서도 '맞춤식 외교', 특정 어느 국가를 **배제하거나 편승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되 상생하고 상호발전하는 균형외교(신북방정책 준비)**를 통해 새로운 발전동력을 찾아야 할 것임.

연루의 위험, 방기의 위험 극복 → 균형, 국익, 실용

- **자주파 vs 동맹파 논쟁 극복, 핵무장파 vs (한반도) 비핵화 논쟁 극복** : 건강한 숙의가 필요함.
(‘핵 무기 개발’보다는 ‘**핵 능력 국가**’ 수준 유지: 자주적 ‘**핵 농축**’ 자격 확보 요구됨.)
- **국력(국익) 신장과 평화 지향의 대북 정책: Smart Power 신장과 적극적 평화(힘을 가진 적극적 평화 정책)**
- DJ “국익위해 악마와도 손잡아야한다.”

JM “실용외교”

통일부(정동영):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 :

현실적 대안이면서도 남-북 모두 정치외교적, 경제적, 법적 딜레마 상황. ‘**힘 없는 평화는 구걸**’

Thank You !



정 상 료
(전 명지대 교수, 현 유라시아평화연
구원 회원)

[연합세미나 발표문(2026년 6월 22일)]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

임상순 교수(평택대학교)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 미국의 외교, 국방, 경제안보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문서

1. **돈로 독트린(Donroe-Doctrine)** - 1830년 먼로 독트린에 대한 ‘프럼프 수정안’ : 미국의 새로운 고립주의
(1)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회복**하고, 본토와 이 지역 전역의 주요 지역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것

(실행) 2026년 1월 3일 : ‘확고한 결의’ 작전(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 생포 및 강제 이송) - 베네수엘라 원유 80% 중국 수출/당시 중국특사(추샤오치) 방문

(2) **세력 균형과 부담 분배 : 다극체제(세력권 정치)**

“세계적 및 지역적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지배적인 적대 세력의 출현을 막을 것이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통해 각 지역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다.”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2. 중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

- “중국은 부유하고 강력해졌고, 그 부와 권력을 상당한 수준의 이점을 누리는데 사용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성숙하고 부유한 국가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의 관계로 시작했다.”
-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국가 간의 관계로 변모했다.”
-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대만에 대한 **오랜 선언적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대만해협의 현상유지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변화도 지지하지 않는다.”(중국, 대만에 대한 경고)

1.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5)

[참고] 오랜 선언적 정책(1982년 6대 보장,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대만에 제공한 비공식 안보 공약)

1. 미국은 대(對) 대만 무기 수출에 관해 기한을 정하지 않는다.

2. 미국은 대(對) 대만 무기 수출에 있어 중국과 사전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논쟁]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발언

○ “대만에 무기를 추가로 판매하는 문제를 시주석과 논의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 120억달러(17조 9천억원) 대만 무기 수출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다.”

2. 미국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 - 국가안보전략의 하위 문서(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 과 국방 우선순위, 실행 방향 등 설정)

1. 중국 - 군사적 균형, 힘을 통한 평화

-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이다.”
- “중국의 힘은 성장하고 있다. 베이징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민해방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 “중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의 세계 경제 중심 접근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말 것이다.”
- “국가안보전략은 국방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중국이 우리와 우리 동맹국을 지배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방향, 즉 힘을 통한 평화라는 목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2. 미국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 중국, 북한, 한국 관련

2. 북한 - 핵 전력이 미국 본토 위협 수준으로 증대

- “북한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무기, 핵 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탑재하여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 “북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 전력 능력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다. 북한 핵 전력의 규모와 정교함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고 있다.”

[참고] 골든 돔(Golden Dome) : 차세대 우주기반 미사일 다층 방어 프로젝트(트럼프 행정부 추진 중) - 예산 1,750억 달러(약 240조원) 이상 소요

2. 미국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 중국, 북한, 한국 관련

3. 한국 - 북한에 대한 억제 책임 담당, 동맹 현대화

○ “국방부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자체 방어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미군은 필수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 “한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그리고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북한을 억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

○ “이러한 책임의 균형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군사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

3. 중국의 국제정세(미국)에 대한 인식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 발언을 중심으로)

1. 한중 정상회담(2026년 1월 5일) - 시진핑 주석

- “현재 세계는 100년 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 중국의 편에 설 것을 압박

2. 왕이 외교부장 내외신 기자회견(2026년 3월 8일)

-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두 대국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평화공존의 원칙을 지키고, 협력,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
- “중국과 미국은 당연히 세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이 행성에 190여개 국가가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중국이 절대 강대국이 되면 패권을 추구하는 옛길을 가지 않을 것이고, ‘강대국 공동통치’ 논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3. 중국의 국제정세(미국)에 대한 인식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 발언을 중심으로)

3. 중스페인 정상회담(2026년 4월 14일)- 시진핑 주석

○ “오늘날 세계가 혼돈에 휩싸여 있으며 정의와 권력 간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 스페인은 모두 원칙을 중시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가이다.”

○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하는 것을 막고, 유엔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루도록 협력해야 한다.”

4. 중러 정상회담(2026년 5월 20일)-시진핑 주석

○ “현재 세계는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할 위험에 처해 있다.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방주의와 패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러관계는 상호존중,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다.”

4. 2026년 5월 미중정상회담과 미중관계(1)

1. 시진핑 주석 주요 발언(1) : 투키디데스의 함정 발언

[참고] 투키디데스의 함정: 투키디데스「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아테네(도전국가)의 부상과 그에 대한 스파르타(패권국가)의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1) 2015년 9월, “투키디데스의 함정 같은 것은 없다.”

(2) 2023년 10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번영하는 것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다.”

(3) 2024년 11월,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역사적 숙명 이 아니고 신냉전은 해서는 안되고 이길 수도 없다.”

(4) 2026년 5월, “중미 양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인가는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이다.”

4. 2026년 5월 미중정상회담과 미중관계(1)

2. 시진핑 주석 주요 발언(2) : 미중관계 관련 발언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것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 중국몽, ‘2049년까지 중국을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세계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의지’
-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양국관계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는데 찬성했다.”

3. 중국 외교부 성명(설명)

-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란 1) 협력을 주축으로 하는 긍정적 안정, 2) 적당한 경쟁을 수반하는 건전한 안정, 3) 관리 가능한 이견을 동반하는 항구적 안정, 4) 평화를 약속하는 지속적 안정을 의미한다.”
- 경쟁을 현실로 인정하고 관리하겠다는 선언으로, 공식 정상회담에서 언급되고 외교부 성명으로 명시됨

4. 2026년 5월 미중정상회담과 미중관계(2)

- [트럼프 대통령] 주요 발언 : ‘G2’, ‘환상적인 무역합의’**
-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국가이다. 중국과 미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다. 우리는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
 -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문제를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속히 해결해 왔다.”
 - “미중관계는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이다. 우리는 더 큰 협력과 번영을 만들 기회가 있다.”
 - “매우 환상적인 회담이었다. 두 위대한 국가 간 회담이었다. 나는 이를 ‘G2’라고 부르려고 한다.”
 - “미중 양국 모두에게 정말 유익한 환상적인 무역합의를 이루었다. 시 주석이 동의한 것 중 하나는 항공기 200대를 주문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 대두를 대량으로 수입할 예정이다.”

[참고] 중일갈등과 미국의 중립적 대응

1. 중일갈등의 발단

○ 2025년 11월 7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 의회 발언,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만 공격시 일본 자위대 동원

2. 중국의 대응

○ 2025년 11월 9일, 주일 중국 오사카 총영사,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순간에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 늑대외교(자국의 이익수호를 위해 대립도 무릅쓰고 공세적인 외교 행보 보임)

○ 중국,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26년 6개월 80% 감소)

3. 미국의 대응

○ 2025년 11월 24일, 트럼프,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주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

5.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

1. (현황) 동맹의 2차 딜레마 우려

○ 연루: 동맹국의 분쟁에 원치 않게 휘말리는 것

○ 방기: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

2. 미중 군사충돌시 연루 가능성(한미 동맹)

[트럼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 물었지만, 나는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2026년 5월 14일)

[브린슨 주한미군사령관] “중국이 동부해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건 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단검이라 할 한국이다.”(2026년 5월 26일)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물 위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5.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할 것인가?

1. 한미동맹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미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한 상태이다. 패권경쟁이 시작되면 주변국들은 선택을 강요 받을 수밖에 없다.(민주주의, 시장경제 선택)
2. 국익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외교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복합 포트폴리오 외교를 해야 한다.
3. 북한 핵 보유를 일단 인정하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 ‘동결에 대한 보상’을 입구로 하고, ‘최종적인 비핵화’를 출구로 설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일) 군사훈련을 축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미중 패권 전쟁의 대리전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4. 하드파워(군사력)와 소프트파워(문화의 힘)를 함께 증진시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교육

박찬석 교수(공주교육대학교)

I. 서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은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에 평화를 낙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였다. 적극적인 의미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은 남북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하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 안의 자유통일을 강조하는 집단과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집단 사이의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의 미래가 담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평화의 실천이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반도의 평화 기반을 둔 헌법적 가치를 먼저 살펴보고 통일교육의 거버넌스 체계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개념 재파악 이해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통일교육 거버넌스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외 평화적 논의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북한의 상황*을 볼 때, 한반도의 평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최대한 대북정책에서 자제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독자적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한국과 조선으로 분명히 구분하여 분단 국가임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남북한의 상황을 이제는 한국과 조선의 상황으로 인식하는 준비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상황은 동북아 역내의 위협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며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

* 원래는 한국과 조선이라고 불러야 하는 데, 국내의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논란을 축소하는 의미에서 한국과 북한으로 정리하였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한국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불러야 상호 이해의 현실적 갈등을 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 바는 5월 방문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리유일 감독이 5월 23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일본 도쿄 베르디 벨레자와의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공식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갈등은 이후 국내 취재진의 질문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 기자가 “북측 여자 축구가 과거부터 수준이 높다”라고 운을 떼자, 리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질문을 제지했다. 이어 통역관을 통해 “국호를 제대로 불러라. 저 사람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 기자가 제차 원하는 표현을 묻자, 김경영은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들은 회견장을 빠져나갔고, 다른 선수들 또한 공동 취재 구역(공동 취재 구역)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지나갔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524/133984263/2>, 검색 2026.05.25.)

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한국 사회는 동북아를 포함하여 세계 정세를 바로 알고 국내 대외 및 대북정책에서 갈등 줄이기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현재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동안 통일교육에서 소홀히 취급됐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려면 통일교육이 말하는 자유, 번영, 평화의 지속은 대안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 가치는 통일의 근간이 되게 하면서 평등 가치를 대등하게 도모하여야 한다. 통일 미래 세대에게 자유와 평등이 지속적으로 가치를 수호할 것을 통일교육 내용에서는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번영은 연대를 이루는 노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미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근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극우화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민주주의 체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력들의 연대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제시하며 통일의 의사를 철회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더 평화를 위한 조치를 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평화의 위축을 막기 위해 한반도에서 통일 증진의 안보적 역할과 책임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통일교육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고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가치를 지속하는 내부적인 논의 증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II.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평화와 안보의 통일교육 논의

1. 자유와 평등의 통일교육

2025년 6월 4일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자유 민주 사회로의 진입을 다시 알리는 기점이다. 한국 사회의 지금의 위치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2026년 오늘도 국내외적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첫째, 국내적으로 계엄 옹호 세력들이 보수 우파들과 결합하려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자유민주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잘 조화를 이룬 통일교육이 어느 때

* 임상순(2026),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서의 평화", 2026 북한연구학회 신년포럼 『평화이론과 대북 통일정책』 2026년 1월 28일 발표 자료집, p.4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9122600001>(검색 일자, 2026.5.25.)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9일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말했다.

보다 요청된다. 둘째,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가 잘못 인식된 자유 과잉에 기반을 둔다면 갈등을 심화하고 그에 관한 판단이 흐려진다.

이러한 상황 관련으로 통일교육은 자유의 가치를 우선하기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둔 평등 요소가 중요하다. 자유·인권·법치 등의 인류 보편가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유 못지않게 평등적 인식을 보강하여 상호 이해적 측면을 잘 가름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극단적 보수 세력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입장에 대해 우파들은 지지도 많이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파악하면 북한의 시장화·정보화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을 붕괴하는 길이 북한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찾는 길이라도 전쟁을 막을 수는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남과 북에 존재하는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 사회는 그동안 통일방안에 대해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통일방안에서는 자유를 자제하고 평등을 조화롭게 지속하는 통일방안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바로 북한을 배려하려는 통일교육적 논의가 조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 통일방안에는 자유의 입장이 더 북각되고 유지발전하면서도 평등성에 대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스스로 채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기에 앞으로 진행하는 새로운 통일정책과 통일교육은 그 세심한 북한 상호적 태도가 정책 비전과 실행에서 잘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내외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통일교육은 자유의 과잉과 결핍 막는 평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던 자유의 과잉적 해석과 방침에 대해 재고를 이루어 냈다. 자유는 인권 문제를 수반하는 바, 북한에 인권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과제이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 문제를 사회적 공감을 이루어내는 시간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서구적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을 다루는 입장도 중요하지만 북한 사회의 안정적인 변화를 위해 평등권에 입각한 북한 인권의 파악도 오늘날 중요한 시대 반영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찾아 보아야 할 점은 진정성 있는 자유와 평등의 논의를 계속하는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학교 및 사회 분야에서 다양하게 자유와 평등 논의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청된다. 중앙 정부의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는 다양한 자유와 평등 논의를 잘 수렴할 입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 정부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확산을 위해선 중앙정부-지방정부, 정부-학교, 정부

-시민단체, 다양한 집단 간 거버넌스 체계가 효율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또한 효율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각자의 상황에 어울리는 통일교육의 진행을 잘 구축하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중시하는 보편적 세계 질서와 북한이 겪고 있는 특수적 상황을 포함한 다각적인 통일교육의 파악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 내부의 일부 권위주의 인식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견뎌 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위협하고 분단 이후 남북한 모두 지속해 오던 통일을 위한 노력을 폄하하는 주장들은 매우 위험하기에 자유 민주주의체제의 자유와 평등을 가치에 둔 통일교육의 제시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 번영과 연대를 구축하는 통일교육 반영

남북한의 통일은 독일의 흡수통일적 입장을 배제하고 통일 이전 서독의 통일교육적 진행 자세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1960년대 말까지 기독교민주당(CDU) 집권 시에는 서독만이 독일을 대변하는 정부임을 주장하고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에 따라 동독과 외교관계를 맺을 시 서독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므로 구서독의 통일교육 역시 동독에 대한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동독체제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1969년부터 사회민주당(SPD)이 집권하고 동방정책(Ostpolitik)을 펼치면서 1969년 동서독 간 정상회담이 열리고 1972년 동서독이 양자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한 기본조약이 체결되면서 통일교육의 기조가 바뀌었다. 특히 1978년 교육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수업에서의 독일문제’ (통일교육지침)가 제시되면서 서독의 통일교육은 보다 객관적 시각으로 동독을 바라보고 동독인들의 역사적 업적을 인정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이러한 구 서독의 자세는 한국 사회의 통일교육 내용에서 장기적 통일을 염두에 두는 객관적 동독 이해의 입장을 객관적 북한 이해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 동서독 간 평화가 우선한다는 점을 구서독 정부가 통일교육 지침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가 통일교육 목표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길을 제시하려면 남북 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 *

통일교육은 그 방향성의 제시에 있어서 남과 북의 주민의 번영을 추구하는 방안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일각에서 보이는 자유의 확대가 과잉이나 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자유의 확대로 북한 현 정부를 타도하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통일교육에 스며들어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통일교육은 전체 국가사회의 책임

* 구 서독은 동서독 정상회담과 기본조약 체결로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기 때문에 동, 서독 통일임을 분명히 하여 통일교육을 전개하였다(통일교육지침 제3장 14절 참조).

안에서 국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기초한 번영과 연대의 원칙 아래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학교의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일방의 번영과 연대가 아니다. 자유 이념은 누리는 자유에 대한 평등을 부각하여야 한다. 그래야 번영과 연대의 이념이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진정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구 서독은 통일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동독의 주민의 안녕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한 입장에도 동독 정부와 차원 높은 회담을 실천하고 접근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사회는 분단 이래로 민주화의 진척에 따른 과정에서 자유와 평등을 기초한 통일로 가는 번영과 연대를 잘 수용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MZ 세대가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남북한 합의와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자유 과잉의 체제로 북한에 확대하려 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더더욱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고정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구 서독이 추구한 바 있는 적극적인 동독 인정의 정책을 잘 수용 반영하여야 한다. 한국의 반공통일, 승공통일, 자유통일은 과거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였다. 이제는 한반도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연대가 요청되는 평화통일교육을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발표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 지침의 긍정적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존재한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문자 그대로 방향 제시일 뿐이다. 가르치는 교육자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기본 방향에 맞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나 학교에 따라 통일교육 수행 방향의 수용범위와 정도가 각기 온도차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통일교육에 대한 권한은 매우 위축되어 있기에 기본 방향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 시종일관 통일교육 실시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조항과 통일교육지원법의 고발 조항이 존재하기에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관련 교과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일논의에서 번영과 연대의 논의를 지속하는 교육적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이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적 균형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통일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통일교육 인식에서 대립되거나 갈등하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균형성의 원칙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속에서 통일교육을 배우는 학습자가 있기에 교사는 더욱 극단화를 막는 보루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일교육 교육자는 스스로 최종 판단이 일반적 상식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원칙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는 통일교육의 지속적인 지향이 한반도 구성원의 번영과 그 구성원들이 화목하게 연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의무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진종

순, 2016, 4-5).

통일교육이 갖는 독립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균형성 원칙·배우는 자를 지향하는 원칙은 민과 관에 산재한 다양한 정치기관들이 통일교육을 갖는 번영성을 신뢰하고 연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진척이 이루어져야 남남갈등의 근본적인 해소가 가능하고 정부기관으로서 정권 변화에 따라 통일교육의 기조가 바뀌는 진폭을 줄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축이 되어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균형성을 갖춘다면 통일교육의 번영 추구하고 연대 확보는 날로 증가될 것이다. 물론 정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진정성은 야당이나 다른 성격을 갖는 단체들이나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그러나 진정성을 보인 통일교육의 번영과 연대의 길을 끊임없이 진척한다면 당대 정부의 통일교육은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매우 참고 가능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통일교육 반영

최근 김정은의 ‘민족, 통일’ 개념 폐기와 ‘2국가론’은 급작스러운 면이 있으며, 통일 문제 접근에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논리는 ‘통일하지 말고 적대적 두 국가로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긴 기간동안 생각한 도출물이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에 대한 가치와 지향의 측면에서 헌법정신과 거리가 먼 주장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북한의 상황을 고려한 통일교육의 준비도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추구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은 북미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강화된 조치로서, 한반도 통일전략의 대폭적인 수정을 의미한다(이중구, 2026, 165-167). 북한 스스로 국가라고 외치면서 통일을 멀리하기에, 한국 사회는 어려운 국면에서 통일교육을 준비할 상황이 요청된다. 그렇기에 한국 사회는 우선 우리 사회의 평화 구축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 진척과 안보통일적 환경 조성 노력도 요구된다. 우리 스스로 안보역량을 구축하면서 북한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 남북 간 소통과 통합을 수립하고 건설적 관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헌법 수호의 길은 평화와 안보 통일교육적 활동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의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화와 안보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배려와 사랑을 갖춘 시민 통일윤리 영역을 강화하여야 할 상황도 놓여 있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분단 이전 우리 사회의 제도적 민족주의적 차원을 뛰어넘는 사회 통합을 모색하는 노력이 헌법 정신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실시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바로 한국의 사회 통합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결합시키는 시민적 평화와 안보 윤리가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사회 통합의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한 주된 역할을 통일교육 통합 방안에 관하여 논하여야 한다. 국민 생활의 정신과 행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가치관, 사회규범, 통일에 관한 시민 윤리 과제와 그 실천 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헌법 정신과 상호보완적 평화 안보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관, 사회규범, 시민 윤리적 통합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원칙과 방안 즉,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결국 상호보완적 평화 안보 통일교육은 바람직한 시민 사회 통합이 기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제의 유연성과 개방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분명 통일교육 실천은 시민적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지난한 과정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시민을 교육하는 길이기 때문에, 진행했던 교육에 있어서 반론을 할 내용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남북한, 한반도 주변의 갈등 국내외적 환경을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통해 통일교육의 방향과 전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도 시민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인내력을 길러야 하는 데, 여기서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의 담론은 평화와 안전, 안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가능한데, 한국 사회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담론 지형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통일 담론 형성에 평화통일교육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되도록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구하려면 적절한 통일교육을 통한 적절한 통일 관련 담론 형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함규진, 2017, 432).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그리고 평화와 안보의 담론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평화통일교육에 강화하고자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라도 북한 주민의 평등성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자유의 북한 주민에게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북체 체제를 붕괴한다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기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 북한 정부와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다.

번영과 연대의 담론은 왜 통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하는 대목이다. 통일은 번영을 강구하고 또한 모두 행복한 삶을 연대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입장을 학생들에게 평화통일교육에서 조성하는 길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이 우려하는 ‘정권붕괴, 흡수통일’을 절대적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번영과 연대 담론은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한 인권을 운운하면 북한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분쟁조장 교육이다. 따라서 북한이 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웠는지를 알고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 구성원의 전체의 번영과 연대를 기초로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리는 모두 다 동의하는 번영과 연대라는 것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분단 관리를 잘 추구하면서 미래의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우발적인 흡수론자들이나 적대적 두 국가론자들이 전쟁을 미화할 단서를 평화통일교육에서 자제하는 방안을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평화와 안보 담론은 현 한반도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다. 평화와 안보 논의의 평화통일교육은 공화의 담론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그리고 평화와 안보 담론은 현 사태의 남북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최소한의 지향을 가져야 할 사안을 포함하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이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의 통일 논의와 통일 교육은 정부와 시민들의 더 깊은 숙의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의견을 공유하여야 한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되고, 경제정의 문제, 인권 문제, 여성 문제, 환경 문제가 두루 고려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의에는 다양한 집단과 북한 인사들에게도 참여가 늘 열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시민들과 통일 주체들의 적극적인 통일문제 참여와 숙의, 그를 통한 적절하고 정의로운 통일정책 형성, 그를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지향이 건설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지역의 통일교육 역할은 주민의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 일반 성인 등에게 평화와 통일 의미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중앙 정부가 중심되어 통일교육 정책이 강조된 바 있다. 그 속에서 통일교육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진일보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일은 분단이 만들어낸 자유의 단절, 안전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와 더불어 모든 한반도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길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고 자기 주체성을 잘 유지하는 통일 기반 조성에 스스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한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나 각 학교, 사회 단체가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통일 미래를 보장 받는 행복한 나라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MZ 세대를 반영한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1.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평화와 안보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통일교육

통일은 대한민국이 공고한 자유, 평등 그리고 번영과 연대, 평화와 안보 위에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를 강화하는 통일교육은 한반도 미래 발전 전략이다. 통일로 경제영토와 문화적 사상적 확장이 전역으로 확대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회이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더욱 큰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그리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추구하려면 한국의 통일교육은 국제 사회와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 국가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평화와 안보의 기폭제가 되는 세계사적 쾌거가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 남남갈등의 해소와 남북갈등의 완화를 구현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시민적인 사고의 확산은 반드시 한반도 구성원의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평화와 안보가 실천되는 행복한 과정이어야 한다.

통일 한반도로 가는 길은 세계 시민들과 인류 보편가치 공유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정의와 법치가 구현된 남북한 관계 질서가 이루어지는 선도적 과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일의 근본 가치인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평화와 안보'의 개념은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60년 4월 혁명,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2024-5년 '윤석열 정부 퇴진 시민운동' 까지 관통하는 가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MZ 세대에게 통일은 아직 남겨진 미완의 과제이며,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남북한 상황과 남북한 주민의 삶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 상태를 평화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다. 먼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키면서 남북한 주민의 삶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MZ 세대는 사회의 통일 역량강화를 위한 담론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은 통일을 위해 한국 사회가 점진적이고 대화와 타협에 근거한 통일 과정을 이루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남과 북이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상호협력하면서 동반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교실이나 사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MZ 세대는 사회 변화의 특징 반영, 수요자 특성에 어울리는 맞춤형 통일교육의 수요자이며 개발자가 될 수 있다. 2030 세대는 뉴노멀 및 물리적 영역, 디지털 영역, 생물학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복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기에 그들이 만드는 통일교육 자료를 검증받고 스스로 통일교육 수요자이며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 MZ 세대의 극우화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는 길은 통일교육 수요자인 MZ 세대가 스스로 통일교육 지식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수요자 중심의 토론식 수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조건을 바뀌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비판적 사고능력, 협업능력, 감성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다. MZ 세대가 스스로 만드는 통일교육 콘텐츠는 개발과 함께 이를 검증하는 학교 안의

위원회나 학교 밖에서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분단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타인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관용성,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역량을 강화하는 교수법이나 통일교육 콘텐츠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을 구별해 통일교육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익스플로러 등의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2030 MZ 세대들은 온라인에서 좀 더 다양하게 소통하고 효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이에 온라인 통일교육, 새로운 교수법과 콘텐츠 개발 등은 전문성, 기획력, 시민과 소통 경험, 인력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일민간단체와 결합된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마음 열기,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과 놀이, 인문학과 문화적 접근, 통일기행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게 할 수 있다.

학교와 민간단체의 결합은 새로운 콘텐츠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30세대 통일 활동가는 통일교육 양성사업을 통해 미래통일세대와 가장 가깝게 교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청년 활동가는 통일교육의 가뭄과 같은 현실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이다. 청년 활동가들이 새로운 문화 흐름을 반영하며 눈높이에 맞는 통일 프로그램을 개발, 심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IV.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융합한 시스템의 구축

1. 효과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배경과 이유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에 대한 통일교육 서비스에 실제적인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변화에도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낮은 관심, 정권변화에 따른 대북 및 통일관의 높은 편차, 통일교육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은 효과적인 통일교육에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는 통일 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조직의 기능과 업무 재검토, 통일교육 기능 체계의 점검과 개선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역사회 통일교육의 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센터와 통일관 등 지역사회 통일교육 전달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진중순, 2016, 1-2). 이런 배경에서 융합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앞에서 본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을 보면,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많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달성되면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지향하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 계획적, 장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은 교육시스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반면, 사회통일교육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공감과 이해를 전제로 하는 교육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효과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이 요구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현행 통일교육의 현황에서는 인재 양성과 교육 내용 개발과 연구, 통일교육 관련 생태계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영역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고 영향을 주면서 진행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2. 융합적 통일교육 시스템의 방향 제시

효과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의 필요성에 따르면, 일방적인 교육내용의 전달과 같은 기존에 실행해 본 방식도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와 공감을 전제로 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의 방향이라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의 중점 방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추구, 개인의 자유인권·복지·존엄성 확대와 국가 및 민족공동체 발전,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주도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자유·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또한 통일의 상대인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라는 점을 인식하여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냉철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의 담론이 필요한데,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화해, 조화, 공화의 담론이 요구되고, 보다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으로 북한 인권 개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담론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융합한 통일교육 시스템의 구축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에 대한 통일교육 서비스에 실제적인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국민들의 눈높이도 상향되었다. 이러한 정부와 학교, 통일민간단체는 통일교육적 상황을 잘 파악하고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할 상황에서 통일 한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 MZ 세대는 반드시 극복할 방안을 융합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의 목표와 중점 방향을 보면, 달성되어야 할 목표가 많으며 서로 관련되어 있어 어느 하나가 달성되면서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지향하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교육으로 제시된 담론을 고려하면,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재의 인정과 수용을 전제로 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행 과정부터 효과적인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은 교육시스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사회통일교육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공감과 이해를 전제로 하는 교육방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효과적인 통일교육 시스템이 요구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현행 통일교육의 현황에서는 인재 양성과 교육 내용 개발과 연구, 통일교육 관련 생태계의 조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영역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고 영향을 주면서 진행된다는 것을 통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단체 청년 실무자 양성과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민간단체 경력자 지원사업, 평생교육대학원 지원,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 통일교육 관련 실무자 자존감 강화 등의 포상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은 열린 민족주의를 포함하는 세계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분명 통일의식의 변화는 2000년대 초 통일의 필요성 80%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후 세대의 등장,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통일 논의에 대한 피로감, 사회 갈등과 경제적 부담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청소년과 2030세대는 평화, 전쟁의 위협 제거, 남북한 인권 개선 등 보편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부상하고, 결과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세대 의식을 변화하는 노력이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3. 남남갈등의 극단성 극복을 위한 노력 절실

극단적 보수 세력들이나 진보 세력들은 극단적 대북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객관적인

북한 인식을 부정하고 있음. 이러한 극단주의적 입장이 통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임. 실제로 통일은 인내심을 갖고 대북 안보 능력 배양과 더불어 대북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시민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시민적 자질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중북 논리나 반공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대북 인식과 대미 인식에 있어서 민주적 인식을 못하는 신민적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바로 반복 의식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임. 그렇기에 정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 합리성을 갖추고 극단적 보수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개방적인 진보나 보수 진영을 벌어나려는 노력의 기획을 전개하여야 함.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MZ 세대의 통일관을 위해서라도 통일 및 북한 인식의 인내력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전개되지 못하면, 우리 통일교육 학계는 통일과 북한 이해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학생들을 키워 나가야할 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분단 현실을 고민하는 ‘사회적 성찰성(social reflectivity)’이 국민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기준점에는 정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부가 시민의 육성에 대해 더욱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유홍림, 2005, 18).

분단 사회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교육의 성찰을 강화하고, 특히 극단적인 보수나 진보 세력들은 통일교육의 ‘사회적 성찰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도 더 의연하게 보수 세력들의 우려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경청도 필요함. 그러한 경청과 소통 속에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함께 사회 연대성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 및 사회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원동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에서 통일교육은 ‘사회적 성찰성’을 실천하여야 한다. 그 실천은 학생들에게 통일의지 강화와 남남갈등 해소에 대한 호소력을 갖도록 하는 통일교육을 구현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회는 평소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사상의 국가이기에 다른 사상이나 의견을 가지라고 할 수 없는 사정이다. 이에 한국 사회라도 상호 소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20대 극우논리의 부각은 매우 걱정되는 사안이다. 이는 모두 기성 세대의 정치적 논리가 상호 소통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각하는 데 정략적으로 이용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대를 배제하고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자유로움과 평등자세와 함께 변영하고 연대하는 정신, 평화의식와 안보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노력으로 향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남 및 남북 간의 사회적 통합이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IV. 결론: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한 길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은 우선 통일에 대한 전환기적 사고의 교육이 요청된다. 그 전환기적 사고 과정을 진행하려면 통일교육의 주체인 학생, 국민들이 현실적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법적 근거를 갖는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여기서 통일교육 목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실현의지와 태도 확립,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 시민의식 고취,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건전한 안보관 및 객관적 북한관 정립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바탕에서 지향하는 통일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적 통일이야 한다. 그런데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사명 의식을 신장시키려면 MZ 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강력한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이 생활방식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는 노력이 중요하다. 권위주의나 독재국가에서는 통일 상황이 전쟁으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합적으로 가질 수 있는 통일교육의 지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 구축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인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통일교육은 북한 주민을 더불어 살아갈 대상이자 민족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체의 안보위협 요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제반 가치와 제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안보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면서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협력의 상대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이해는 객관적 사실과 인류 보편적 가치 규범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사회는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그리고 안보와 평화를 위해 북한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주의론 부상에 따른 통일교육 논의의 보편화 강화를 논의하여야 한다. 1990년대 탈냉전의 세계사적 변화와 대내적으로 민주주의 공고화, 2000년대 한반도

의 분단체제 약화, 다문화사회와 다원주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통일문제에도 민족, 국가, 이념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논의 시작, 통일문제를 세계 보편사의 차원으로 보는 세계시민주의 등장한다.

이제 세계시민주의는 세계화 현상을 초국민, 초국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 차원에서 경험적인 문제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등장 배경은 세계화 진행 동시에 테러, 다국적 기업의 횡포, 환경과 파괴 등 다양한 지구촌 문제 발생하고 개인의 삶과 세계의 미래는 깊은 상호의존이 이루어진다.

결국 통일은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해하면서 세계시민주의로 향하는 길이다. 한국 사회가 통일로 가는 길은 바로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평등, 번영과 연대 그리고 평화와 안보로의 진척인 것이다. 국가나 민족의 단위로 규정했던 개인의 삶을 사유와 정치에서 벗어나 세계적 문제 해결과 개인의 삶과 연계하여 사고가 이루어져서, 결국 MZ 세대는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의 가치를 더욱 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균·신병호, 2021,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서울: 베가박스).
- 김창환, 2003, “통일 전 동·서독 학교 통일교육의 이념과 실상”, 『한독교육학연구』, 제8권 1호, 17-4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4년 3분기 통일 여론 · 동향].
- 박주화 외, 2017,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 박찬석, 2024, “공주교육대학교 통일교육사업 사례 발표”, 2024년 통일교육 연합학술대회 발표자료(12월 6일).
- 박현철·강진웅, 2024, “청소년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피스로드 사업 참여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통일교육연구”, 제21권 1호, 31-50.
- 유홍림, 2005, “현대 사회의 특성과 정치의 역할”, 『현대 정치의 이해』(고양: 인간사랑, 2005).
- 이갑준, 2022, 사회통일교육의 변천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 논문.
- 이임복, 2021,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서울: 천그루 숲).
- 이중구, 2026, “북한 적재적 두 국가론의 구성과 선포 요인- 국가제일주의와 대남적개론의 결합”, 『현대북한연구』 제29권 1호, pp. 164-203.
- 전일옥, 2024, “통일교육위원회의 통일인식 분석을 통한 지역통일교육의 효율화 방안: 충남, 대전·세종 통일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제61호.

- 진중순, 2016, “통일교육의 확산 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행정』, 제12권, 1-21.
- 차승주, 2020, “지방정부의 통일교육 법제 정비를 위한 일고찰”, 『통일교육연구』, 제17권 2호, 93-118.
- 통일부, 2016, 『독일통일총서 16: 통일교육 분야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교육 기본방침』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 (서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 하상섭, 2018, “한국정부의 대북·통일 정책과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북한학보』, 제43권 2호, 80-107.
- 함규진, 2017, “남북한 동반과 화합을 위한 통일과 통일교육의 새로운 담론 모색”, 『초등도덕교육』, 제58집, 431-456.
- 황기식, 2015,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독일 통일교육과 한국에의 시사점”, 『유럽연구』, 제33권 4호, 227-250.